

글로벌 이슈 특집 [2024-01]

# 2024년 미국 대선 이후 산업정책 전망과 국내 정책 대응 방향





# 2024년 미국 대선 이후 산업정책 전망과 국내 정책 대응 방향

I . 배경	1
II . 미국의 산업정책	3
1. 미국 산업정책 역사(略史)	3
2. 트럼프 및 바이든 행정부 산업정책 기조	8
III .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산업정책	11
1. 3대 입법 산업정책	11
2. 통상정책	19
3. 대내외 투자 규제	23
4. 기타 전략 산업 정책	25
IV . 트럼프 후보의 주요 산업정책	28
1. 트럼프 행정부(2017~2021)의 산업정책	28
2. 트럼프 후보 2024년 선거 공약의 산업정책	34
V . 대선 후 산업정책 전망	38
1.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강(Platform) 비교	38
2. 해리스 집권 시 산업정책 추진 전망	40
3. 트럼프 집권 시 산업정책 추진 전망	45
VI . 미국 대선의 영향 및 대응 방향	50
1. 주요 영향	50
2. 대응 방향	56



## 요 약

### ● 2024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가운데, 해리스(민주당)와 트럼프(공화당)의 호각세가 이어지며 국내외 이목 집중

- 해리스 당선 시 기존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되던 정책이 상당 부분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트럼프 당선 시 주요 산업정책 전반에서 많은 변화 예상
- 미국 대선 이후 산업정책의 변화는 우리나라 산업 여건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적절한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미국은 그동안 국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산업정책을 추진해 오
- 특히, 이전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통상정책 위주의 산업정책과 바이든 행정부의 CHIPS법, IRA에 의한 산업정책 추진 등 정부의 개입이 강화되는 추세

### ● 바이든 행정부는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 새로운 대규모 투자를 추진한다는 선거공약 실천으로부터 출발

- ‘더 나은 재건 계획’이라고 명명한 미국 구제 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 2021), 미국 고용 계획 구상(→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 미국 가족 계획 구상(→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내걸고 적극적 산업정책 추진

### ● 미국 고용 계획 구상과 인프라 투자·고용법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본격적 산업정책으로 추진된 대규모 인프라 투자

- 미국 고용 계획 구상에서는 인프라 투자와 함께 환경정책, 국내 제조업 공급망 강화, 중소기업 지원 및 기타 연구개발 혁신 등에 2.6조 달러의 대규모 투자 포함
- 그러나 의회에서 공화당의 반대로 이후 1.2조 달러의 투자 규모로 인프라 투자 중심으로 축소되어 최종적으로 인프라·투자 고용법으로 확정

### ● 미국 반도체 및 과학법은 미국 상원의 미국혁신경쟁법(USICA)과 하원의 미국경쟁력 강화법(America COMPETES Act)이 1년여의 양원 및 양당의 조정과정을 거쳐 CHIPS법으로 바이든 대통령 서명 후 공표(2022.8)

- 2021년의 미국혁신경쟁법은 과학기술투자 추진을 목적으로 심의되던 무한프론티어법(Endless Frontier Act)에 새로운 혁신·경쟁력 정책 관련 법안을 결합한 것

- CHIPS 법의 핵심 목적은 중국과의 경쟁에 있어서 핵심 분야 중 하나인 미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 CHIPS에 의한 재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미국 경제 및 국가안보 목표와의 연관성 여부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에 따른 주요 내용의 지침을 따라야 함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이전의 미국 가족 계획(American Families Plan) 구상과 더 나은 재건법(Build Back Better Act, BBB)안의 내용이 통합되어 성립**

- IRA는 전기차 및 배터리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한 글로벌 공급망 구축이 주목적
  - 보조금과 관련하여,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의 미국 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친환경차 세액공제조항, 첨단 제조생산 세액공제, Capex 지원금의 3가지 규정 포함
- IRA는 청정 에너지 투자 유도를 위한 조세 공제 등 환경 정책 투자, 의료 보험 보조 연장, 대기업 과세 강화 등의 내용이 통합되어 있음

**● 바이든 행정부는 3대 입법 산업정책 이외에 관세정책 및 대내외 투자 규제에 의한 산업정책 추진**

- 대중규제의 일환으로 2022년 10월에 첨단전략 제품의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조치, 2024년 5월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대중 추가 관세 조치를 공표
- 2022년 9월에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의 산업 안보에 중요한 외국인 투자를 심사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CFIUS(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 심사의 중시하는 항목들을 제시

**● 트럼프 후보는 이전 집권기에 다양한 통상정책 수단을 동원해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임으로써 미국의 국내총생산과 국내 고용을 증대시킨다는 방향의 산업정책 추진**

-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정책에서는 통상정책이 두드러지는데, 그 특징은 ①양자 간 무역 협상, ②전통산업 보호, ③첨단산업 사수의 3가지로 나타낼 수 있음

**● 트럼프 후보는 아젠다 47, 미국우선 정책연구소 아젠다, 프로젝트 2025 등을 통해 향후 정책 공약을 제시**

- 아젠다 47에서는 보편적 기본 관세 도입과 IRA에 대한 반대 입장, 미국우선 정책연구소 아젠다에서는 미국을 위한 무역협정 추진, 프로젝트 25에서는 기존 기후변화 정책의 완화 등을 제시

- 이번 대선을 통해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기존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되어 오던 산업 정책의 급격한 전환이 예상됨
- 트럼프 후보 집권 시 바이든 행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해 온 CHIPS법과 IRA의 완전 철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원 축소 예상
  - 트럼프는 해당 법의 철회를 강력히 제시하고 있으나 그동안 해당 법을 통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온 지역구의 이해관계로 완전 철회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대신 행정부 권한을 활용한 법안 축소 예상
  - IRA의 경우, 전기차 세액공제 보조금이 폐지되면, 국내 배터리업체의 첨단 제조생산 세액공제 혜택 및 국내 자동차업체의 대미 수출 상업용 친환경 차량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에 타격 예상
  - CHIPS법의 축소나 보조금 지원 조건상 가드레일 조항이 기존에 비해 국내 기업에 비우호적으로 결정될 경우, 국내 관련 기업의 자금압박 등 부정적 영향을 받을 전망
- 트럼프 후보는 탄소 배출량 감축 정책의 폐지나 고비용의 친환경에너지 대신 저렴한 화석연료 개발 촉진 등 기존 정책과는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트럼프 후보 집권 시, 이로 인한 막대한 영향 예상
  - 트럼프 후보 집권 시, 2030년까지 신차의 50%를 무공해 차량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바이든 정부의 행정명령을 다시 폐기할 가능성 있음
  - 트럼프 후보가 집권하여 미국 내 셰일 오일 생산 확대, 석유 업체에 대한 규제 및 세금 완화, 전략 비축유 추가 확보 등의 에너지 정책을 시행할 경우, 국제유가의 하향 안정화를 초래할 전망
  - 트럼프 집권 시 미국은 가스 및 원자력 발전 위주의 전력시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전력시장에서도 LNG 발전의 중요성이 부각될 가능성
-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대중국 규제나 보호무역주의는 트럼프나 해리스 중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
  - 중국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 위상의 쇠퇴와 그에 따른 세계 경제질서 내 주도권 상실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강화되어 옴
  - 대중국 제재 강화의 차원에서 트럼프 집권에 의해 보편적 관세율이 적용될 경우, 우리나라 이차전지, 자동차, 반도체 업체들의 수익성 악화 예상
  -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 과거처럼 한국을 비롯해 미국을 상대로 무역수지 흑자를 크게 기록하고 있는 국가가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 높음

- 공급망에서 미국의 대중국 배제 정책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국 내 경쟁에서 단기적으로는 유리한 위치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나 해당 물량의 공급 지역 전환이나 원자재 확보 제약에 따른 부정적 영향 우려

- 국내의 정책적 차원이나 기업의 대응 차원에서도 미국 대선에 따른 산업정책 변화 전망에 대응한 전략 수립 필요
- 예상되는 통상 현안에 대한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체계 마련
- 주요 통상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소규모 다자 협력체계 구축과 중장기적 전략적 대응책 마련
- 특히, 트럼프 당선 시 IRA의 기존 규정들을 일부 무력화하거나 미국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운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향후 비즈니스 플랜을 구상
- 미국의 대중 견제 조치에 대한 지속적인 진화와 포괄적 제재 강화에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며, 반도체, 이차전지 분야 원자재의 원활한 확보 방안 마련
- 국내의 관련 첨단기술·산업 분야 투자유치를 위한 리쇼어링(Reshoring) 전략, 외투기업 지원 확대, 기술협력 강화 및 국내 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 분야 유치 여건 개선과 국내 경쟁력 강화 추진 필요

### 민주당과 공화당의 주요 정책 비교

항목	민주당(해리스)	공화당(트럼프)
통상 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맹국 간 자유무역</li> <li>• 다자주의 지향</li> <li>• 관세보다 간접적 제재수단 선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력한 보호무역 장벽</li> <li>• 국가 간 협상 선호</li> <li>• 보복관세 적극 활용</li> </ul>
대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erisking(특정 위험요소만 제거)</li> <li>• 현행 관세 유지</li> <li>• 첨단산업에 한정한 수출통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ecoupling(GVC에서 중국 배제)</li> <li>• 최고 60% 세율 적용, 최혜국대우 철폐</li> <li>• 시장왜곡 시정 목적의 보조금 지급</li> </ul>
공급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쇼어링과 프렌드 쇼어링 흔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국 중심의 온쇼어링</li> </ul>
세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세율 인상, 고소득자 증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세율 인하, 개인소득세 감세</li> </ul>
ES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RA 보조금 정책 지속</li> <li>• 재생에너지와 친환경사업 투자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도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RA 폐지 or 축소</li> <li>• 저렴한 화석연료 생산 지원을 통한 에너지 가격 인하에 초점</li> </ul>
외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우전쟁 지속</li> <li>• 동맹 연계 협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우전쟁 종결</li> <li>• 동맹에 대한 비용 분담 압박</li> </ul>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보험 확대</li> <li>• 이민 절차 간소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디케어 축소</li> <li>• 불법 이민자 중심으로 규제 강화</li> </ul>

출처 : 한국신용평가(2024.8.13), 2024 미국 대선에 따른 영향 점검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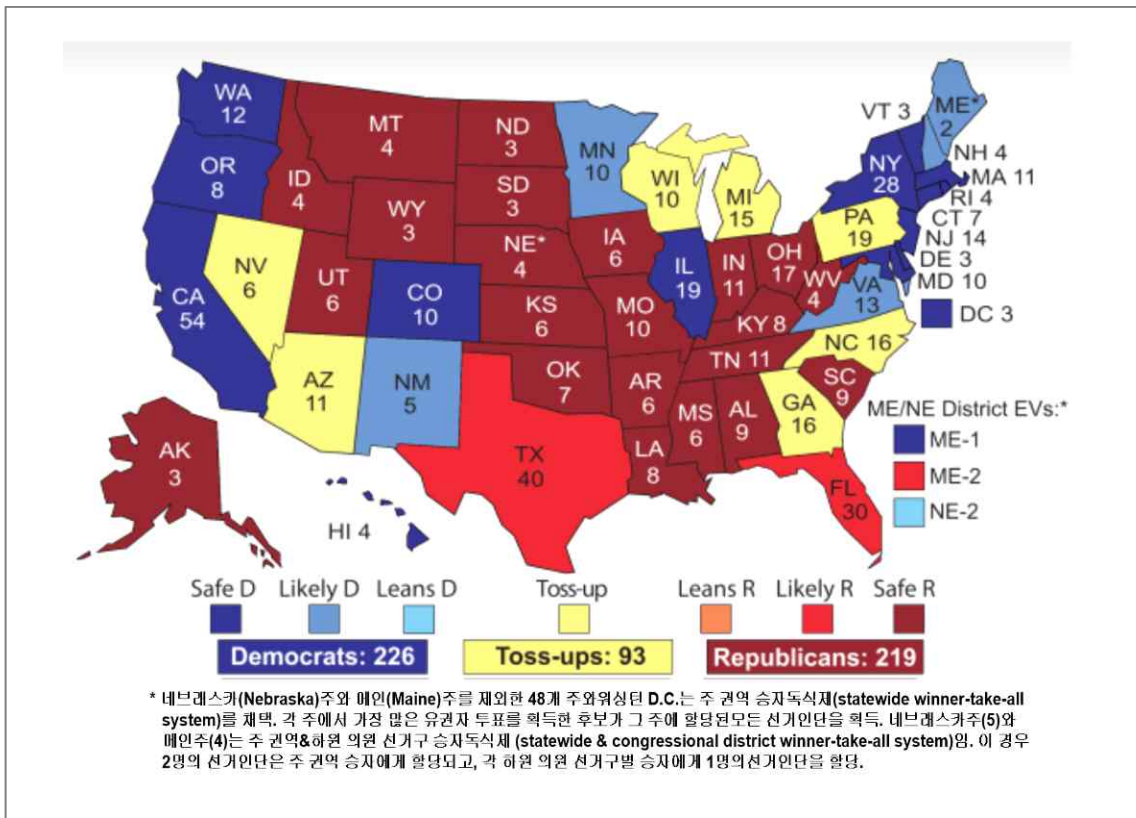


# I. 배경

**2024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가운데, 해리스(민주당)와 트럼프(공화당)의 호각세가 이어지며 국내외 이목 집중**

- 2024년 9월 공개된 전국 여론조사 집계 결과 민주당 해리스 후보(48.4%)가 공화당 트럼프 후보(45.6%)를 조금 앞선 것으로 나타남<sup>1)</sup>
- 2024년 8월 시점에서 선거인단 확보에 대한 예측을 보면, 민주당이 226명, 공화당이 219명이고, 경합 주의 선거인단 수가 93명으로 나타남

[그림 1] 2024 미국 대선 선거인단 확보 예측 (24년 8월 기준)



출처 : Sabato's Crystal Ball(2024.8.20.), 2024 Electoral College ratings (<https://centerforpolitics.org/crystalball/2024-president/>).

1) abc News(<https://abcnews.go.com/538>), 2024.9.20.

● **해리스 당선 시 기존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되던 정책이 상당 부분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트럼프 집권 시 주요 산업정책 전반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

-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 기본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유지되거나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더 강화된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
-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기본적으로 과거 집권 시의 정책과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정책을 주된 방향으로 하여 추진하겠지만, 의회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제약이 있을 것으로 전망
  -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 및 각종 환경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공언하며 화석연료 생산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
  - 보호무역주의를 통해 자국 제조기업을 보호하고 외국 기업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의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고자 의회 승인 절차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
  - 외국인 투자 규제를 강화하여 미국의 공급망 안보를 위해 중국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기업의 자국 투자에 대해 엄격한 심사 전망
- 어느 쪽이 당선되든 승리한 당이 상·하원에서 모두 다수당이 되지 않는 한, 기존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는 극단적 정책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미국 대선 이후 산업정책의 변화는 우리나라 산업 여건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적절한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대중국 전략, 공급망·통상 정책, 환경정책 등의 추진 내용에 따라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글로벌 공급망 구조 재편은 큰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국가적 전략 수립을 통한 선제 대응이 시급

● **본 보고서는 대선 이후 미국 산업정책 추진 내용과 그에 따른 산업 및 통상 환경 변화 전망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

-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보다는 양 후보 및 민주당과 공화당이 제시하는 산업 정책의 차이를 중심으로 향후 예상되는 산업정책의 방향을 제시
- 특히, 보다 강화되어 가는 자국 이익 중심의 미국 산업정책의 기조, 기본적으로 미국 내 사회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정책 방향 및 양 진영의 정책적 수렴 현상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함
- 향후 미국 대선 결과는 국제관계의 다자간 질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 내 변화와 한미 양국 간 관계 및 그에 따른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II. 미국의 산업정책

### 1 미국 산업정책 역사(略史)

- **산업정책은 정부가 국가 안보 또는 경제적 측면에서 국가 경쟁력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특정 경제 부문의 확장을 다른 부문보다 장려하거나 직접 지원하는 정부 조치로 정의<sup>2)</sup>**
  - 대상 특정 산업은 중공업, 항공우주, 반도체, 전기 자동차 등 첨단산업 혹은 군사 응용 산업 등의 제조업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서비스업 등도 포함
  - 정책 조치로는 보호 관세 또는 기타 무역 제한, 직접 보조금 또는 세액공제, 연구개발(R&D)에 대한 공공 지출, 정부 조달 등 포함
  - 산업정책의 범위는 산업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정책 외에 국내의 관련 산업에 영향을 주는 통상정책이나 대내외 투자에 대한 정책 외에 독점금지법 등의 산업조직 정책 등도 포함<sup>3)</sup>
- **미국 산업정책<sup>4)</sup>의 효시는 해밀턴 초대 재무장관의 제조업에 관한 보고서(1791)<sup>5)</sup>라고 할 수 있고, 이후 유사한 형태의 정책이 추진되어 옴**
  - 보고서에서 관세와 보조금을 결합하여 미국의 제조 부문을 지원하는 내용이 일부 법제화되었고, 이후 1862년 태평양철도법 제정에 의한 대륙 횡단철도 건설, 모릴법 제정에 의한 농업대학과 기술대학 설립 등의 산업정책 도입
- **20세기 들어와서 미국은 전보다 자주 산업정책을 추진하였고, 1930년대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과 2차세계대전 이후 소련과의 경쟁에 따른 산업정책의 본격화가 대표적인 사례**
  - 뉴딜 정책에서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해 국가부흥청(National Recovery Administration, NRA)을 중심으로 임금과 가격을 규제하였고, 2차세계대전 이후에는 대규모 연구 개발 투자 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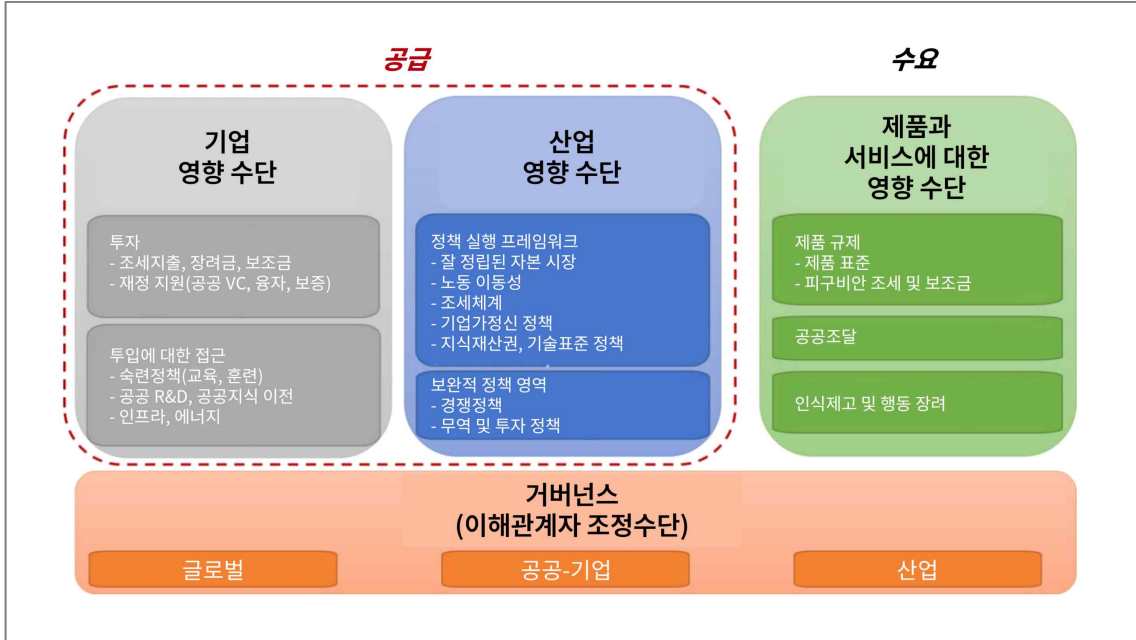
2) Council on Foreign Relations(2023.9), Is Industrial Policy Making a Comeback?, <https://www.cfr.org/backgrounder/industrial-policy-making-comeback>

3) OECD(2022.4), An Industrial Policy Framework For Oecd Countries Old Debates, New Perspectives

4) 미국 산업정책의 유무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자국의 산업경쟁력을 유지·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실시되어온 것으로 보임. 미국의 정책적 기조는 자유무역이라는 이상적 주장하에 실제로는 해밀턴식 적극적 산업정책을 써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서울경제(2024.1.22.), 이정동 “美대선 누가 승리하든 산업정책 본질 똑같아…韓추격형 경제 끝내야”

5) <https://founders.archives.gov/documents/Hamilton/01-10-02-0001-0007>

[그림 2] 산업정책의 주요 영역과 수단



출처 : OECD(2022.4), An Industrial Policy Framework For Oecd Countries Old Debates, New Perspectives

● 미국은 2차세계대전 이후, 거시경제 운영에 대한 정부 개입은 허용하지만, 개별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정부 개입에는 부정적인 입장 견지

- 연방정부의 참여는 1960년대 록히드사 규제, 1980년대 크라이슬러사 규제 등에 한정되었고, 다른 나라에서 주로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산업정책은 주로 주정부가 담당

●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사이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이후 미국은 초당적 차원에서, 정부의 직접 개입보다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의 정책 추진

- 1980년대 규제 완화 정책은 창업, 정부 기관과 대학의 민간기업으로의 기술이전, 산학연 제휴 등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음
  - 바이-돌 법(Bay-Dol Act, 1980) : 기존의 특허 및 상표법에 대한 개정법으로 연방정부 자금으로 연구 개발한 특허를 대학이나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가
  -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SBIR,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1982) : 연구비 지출이 많은 부처에 2.5% 규모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지원 의무화
  - 국가경쟁력 기술이전법(National Competitiveness Technology Transfer Act, 1989) : 국립 연구 기관과 대학, 기업 등과의 공동 연구 촉진

- 당시 산업정책의 목표는 첨단제조업을 핵심으로 하는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특정 산업보다는 여러 산업을 대상으로 함
- 또한 1980년대 후반에는 종합대외무역경쟁법(Omnibus Foreign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1988)의 슈퍼301조 등의 입법화에서 나타나듯이 통상정책을 통한 정부의 참여가 추진되기 시작
- **1990년대에는 이전 민주당 주도의 연방의회 하원이 공화당 보수파 주도로 전환되면서 당파 대립이 두드러졌고, 산업정책도 크게 부각되지 않음**
  - 이 시기 산업정책의 추진이 외견상 정체되는 가운데, 산학연 네트워크의 활성화, 군축과 재정적자 축소에 따른 저금리 실현 등 신규 창업에 적합한 거시 환경 형성
    - 이 시기, 실리콘 밸리를 모델로 한 첨단산업이 각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성장
- **2000년대 들어서 닷컴 버블의 붕괴, 동시다발 테러로 인한 불황, 미국의 연구 개발 지출의 침체 현상에 대응하여 미국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업정책이 추진**
  - 2004년 혁신생태계 구축을 강조하는 국가혁신이시셔티브(National Innovation Initiative, Palmisano Report)로부터 첨단산업 뿐 아니라 서비스의 혁신의 제언 등에 이르기까지 미국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포괄적인 제언이 이루어짐
  - 이에 따라 아폴로 계획 이후 대규모 과학기술 투자를 목표로 하는 미국 경쟁력강화법(America COMPETES Act, 2007)이 제정
    - 이 법에 대해서는 양당 간 대립이 있었으나 산업계, 학계의 정책 제언을 거쳐, 초당파 상원의원 주도로 이러한 산업정책 입안 실현
- **2000년대 말과 2010년대 초반, 세계금융위기와 경기침체 국면에서 출발한 오바마 행정부는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 정책과 제조업 부흥을 목표로 정책 추진**
  -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 내 민주당은 미국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2009)을 통해 경기침체로부터의 회복,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및 환경 관련 고용 창출 등을 중심으로 하는 그린뉴딜 추진
  - 오바마 행정부는 정권 후반기에 공화당이 연방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며 신규입법을 통한 정책 추진이 어려워졌고, 주로 행정명령으로 정책 추진
    - 행정명령을 통해 제조업 부흥 리쇼어링 정책,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 첨단제조업을 중시한 혁신허브 정책 등을 추진

〈표 1〉 트럼프 행정부 이전 미국 연방의회 구성

대통령(당)	의회 연도	의회 회기	상원분포 (공화/민주)	하원분포 (공화/민주)
카터(민주)	1977~1979	95	38 : 61	143 : 292
	1979~1981	96	41 : 58	158 : 277
레이건(공화)	1981~1983	97	53 : 46	192 : 242
	1983~1987	98	55 : 45	169 : 269
	1983~1987	99	53 : 47	182 : 253
	1987~1989	100	45 : 55	177 : 258
부시(공화)	1989~1991	101	45 : 55	175 : 260
	1991~1993	102	44 : 56	167 : 267
클린턴(민주)	1993~1995	103	43 : 57	176 : 258
	1995~1997	104	52 : 48	230 : 204
	1997~1999	105	55 : 45	228 : 206
	1999~2001	106	55 : 45	223 : 211
부시(공화)	2001~2003	107	50 : 50	221 : 212
	2003~2005	108	51 : 48	229 : 205
	2005~2007	109	55 : 44	232 : 202
	2007~2009	110	49 : 49	202 : 232
오바마(민주)	2009~2011	111	41 : 57	178 : 257
	2011~2013	112	47 : 51	242 : 193
	2013~2015	113	45 : 53	234 : 201
	2015~2017	114	54 : 44	247 : 188

출처: Wikipedia(2024.8), Party divisions of United States Congresses  
[https://en.wikipedia.org/wiki/Party\\_divisions\\_of\\_United\\_States\\_Congresses](https://en.wikipedia.org/wiki/Party_divisions_of_United_States_Congresses)

〈표 2〉 미국 산업정책의 시기 구분 사례

구분	내용
제1기 1950~6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냉전 중 방위 산업 혁신 정책을 확고히 수립한 기간</li> <li>• 1950년경부터 군은 방위 임무를 위해 산업, 대학, 정부라는 핵심 혁신 주체를 통합하기 위해 노력했고, 1958년에 국가 항공우주국(NASA)과 국방고등연구계획국(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설립</li> </ul>
제2기 1970~8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과의 제조업 경쟁 시대</li> <li>• 당시 일본의 경제는 산업 생산 공정의 현대화, 총품질경영 혁명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미국은 혁신 활동과 행위자에 대한 정부의 조정이 부족하여 산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li> <li>• 미국 산업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최첨단 기술 혁신의 선두에 있는 소규모 혁신 기업과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 경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새로운 정책 시도가 이루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방 자금 지원 R&amp;D에서 발생한 특허에 대한 소유권을 대학에 부여한 1980년 Bayh-Dole Act와 연방 연구소에 유사한 인센티브를 도입한 1980년 Stevenson-Wydler Act를 통한 기술 이전 간소화</li> <li>- 소규모 제조업체에 새로운 제조 공정을 제공하기 위한 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과 소규모 회사와 스타트업이 연구를 통해 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프로그램</li> <li>- 그밖에 혁신을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Advanced Technology Program, 제조 품질 및 효율성 개선을 통해 미국 반도체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한 Sematech, 기업이 연구 개발에 투자하도록 장려하는 R&amp;D 세액 공제</li> </ul> </li> </ul>
제3기 200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1년경에 에너지부에서 에너지 혁신을 통해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노력</li> <li>• 새로운 정책은 기존 기능을 수정하기보다는 부서에 새로운 업무를 추가하는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Energy(ARPA-E)</li> <li>- 확대된 재생 에너지 프로그램, 첨단 제조 연구소</li> <li>- 새로운 에너지 기술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프로그램</li> <li>- 새로운 기술 분야에서 기초 연구를 지원하는 Energy Frontier Research Center</li> <li>- 핵심 기술 분야에서 응용 R&amp;D를 촉진하는 에너지 허브</li> </ul> </li> </ul>
제4기 2010년대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단 제조를 중심으로 한 시기</li> <li>•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미국 제조업 고용이 3분의 1로 줄어들었을 때, 60,000개의 공장이 문을 닫았고, 생산이 중국과 다른 나라로 옮겨가 노동 비용의 일부로 운영되고 새로운 효율성을 도입 추진</li> <li>• 미국의 혁신 역량을 적용하여 제조 생산성을 가속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방 정부는 2012년 이후 국방부, 에너지부, 상무부(국립표준기술원(NIST)을 통해 지원)</li> <li>- Manufacturing USA라는 제조 혁신 연구소 네트워크 구축 : 각 연구소는 3D 프린팅부터 광자공학, 디지털 생산, 로봇공학에 이르기까지 특정한 첨단 제조 기술을 중심으로 조직</li> <li>- 제조 정책이 무역이나 세금 인센티브에 초점을 맞춘 반면, 연구소는 생산성 향상 제조 기술의 도입을 가속화하여 미국이 산업과 대학을 하나로 모으는 협력 모델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3개 연방 기관과 지방 정부의 지원을 받음</li> </ul> </li> </ul>

출처 : William B. Bonvillian(2024.4), Industrial policie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Lessons from the United States

## 2 트럼프 및 바이든 행정부 산업정책 기초

### ●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정책은 다양한 통상정책 수단을 동원해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임으로써 미국의 국내총생산과 국내 고용을 증대시킨다는 것임

-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①거액의 대미 무역흑자국인 중국 경제력 확장 견제, ②불공정 무역 관행\*을 명분으로 다양한 관세 조치 부과, ③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 의한 무역적자 삭감과 국내 제조업 기반 강화임

※ 수출 보조금, 지식재산 절취, 열악한 노동과 환경 기준,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덤핑 등

- 오바마 정부에서 제기되어 온 제조업 부흥이나 미국 내 제조업 회귀 등을 보다 강하게 주장

### ●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정책에서는 통상정책이 두드러지는데, 그 특징은 ①양자 간 무역 협상, ②전통산업 보호, ③첨단산업 사수의 3가지로 나타낼 수 있음

- 양자주의는 통상협상에서 다자간 협의보다는 자국의 국력을 보다 반영할 수 있는 양자간 협의를 선호하는 것임
  - TPP 이탈, NAFTA 재협상, 한국과의 FTA 재협상, G7 정상 공동선언 거부 등이 그 예
- 한때 미국에서 강력한 산업이었던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등 전통산업 관련 수입을 억제하는 전통산업보호 추진
- 중국에 의한 지식재산 침해, 미국 첨단기술기업 인수 등에 대해 적극적 규제 추진
  -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 제한과 동시에 미국 자신에 의한 첨단기술 혁신 추진

〈표 3〉 트럼프 행정부 첨단기술 정책 추진

첨단기술 구분	중국에 대한 기술 접근 제한	미국의 기술개발 촉진
군사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압력을 통한 기존산업정책 및 관행의 시정 요구</li> <li>• 대미투자규제, 대중수출관리</li> <li>• 사람에 의한 기술 유출 규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CT 기업과 연계</li> <li>• 첨단기술의 군사이용</li> </ul>
산업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점 기술 개발의 국가 전략 책정</li> <li>• 중점 기술에 우선 투자</li> </ul>
정보통신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 기업들 제재</li> <li>• 미국 정부의 중국제 정보통신기기 사용 규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 기업 주도의 5G 구축 사업 추진</li> <li>• 국가 주파수 전략 수립</li> </ul>

출처 : 日本国際問題研究所(2020.3), トランプ政権の対外政策と日米関係



● **바이든 정부의 산업정책 기조는 산업정책을 통한 사회과제 해결에 대한 접근 방식을 강조하며, 특히 시장실패 개선, 안보 강화, 분배 문제 해결이라는 키워드에 중점을 둠**

- 이러한 차원에서 시장구조의 왜곡 가능성을 중시하고, 중국과의 대항 문제를 해결하며, 소득 격차·경제 격차를 해결한다는 것을 산업정책의 기조로 설정
  - 이전에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이 적절한 성장과 분배를 가져온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지만, 최근에는 빅테크 기업에 의한 시장구조 왜곡 가능성을 강하게 인식
  -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에 대한 보호주의적 관세 조치로부터 시작된 대중국 압박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더욱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통해 자국 내 제조 기반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
  - 과도한 자유시장 의존에 따른 거대 IT 플랫폼 등에 의한 일부 기업·개인에 부의 집중이 생기고, 중간층이 쇠퇴하며, 빈곤층이 증대하는 현상에 주목
-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정책은 무엇보다도 중국에 대응하여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재편하는 데 있고, 이러한 산업조직 정책의 실제 추진력은 약화됨

● **통상정책 위주의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중국의 세력 확대에 대응하고, 미국 첨단산업 육성 및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차원에 기초한 3대 입법 기반의 산업정책을 포함하여 보다 직접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산업정책을 추진**

- 노동자 중심의 통상정책 추진
  - 예 :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의 신속 대응 메커니즘(Rapid Response Mechanism, RRM)에 노동자의 노동 비용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불공정 경쟁행위 근절 조항 포함
- 경제 안전보장을 대의명분으로 하는 산업정책으로서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2022.8)
  - CHIPS법은 527억 달러에 달하는 반도체 관련 투자 보조금 지원에 미국 내 입지 기업만 지원
  -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4,330억 달러에 달하는 전기자동차(EV)세 공제에 북미 조립을 조건으로 하고, 수소제조 장치의 공제에는 CO2 배출 기준 및 실세 임금 요건 설정
- 3가지 경제 비전을 축으로 하는 바이든노믹스(Bidenomics)의 천명(2023.6)<sup>6)</sup>
  - ①미국에서의 스마트한 공공투자\*, ②중산층을 성장시키기 위한 노동자 교육 및 역량 강화, ③비용을 낮추고, 창업과 중소기업의 번영을 지원하기 위한 경쟁 촉진

※ 인프라, 반도체, 청정에너지 등에서의 공공투자가 흔히 말하는 민간투자를 밀어내는 크라우드링 이펙트 효과를 낳지 않고, 민간투자를 더 많이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

6) US White House(2023.6.28), Bidenomics is working: The President's Plan Grows the Economy from the Middle Out and Bottom Up—Not the Top Down

- 국내 발명·국내 제조 정책 추진(2023.7)<sup>7)</sup>
  - 연구개발(R&D) 지원이 국내생산과 연결되었는지 추적하고, 연구 개발 지원으로 국내 생산을 추천하는 행정명령 발표
- 대중 투자 규제(2023.8)<sup>8)</sup>
  - VC를 포함한 미국 투자자의 AI 및 반도체 분야의 대중 투자규제
- 중요 산업에 관한 반도체 공급망 조사 계획(2023.12)<sup>9)</sup>
  - 상무부는 미국 중요 산업에서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의 이용과 조달에 대한 조사 실시
- 대중 관세 인상 발표(2024.5)<sup>10)</sup>
  - 중국에서 수입하는 EV에 대한 관세를 100%로, 태양전지·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50%로 인상

## ●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정책 동향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움직임은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

- 거대 IT 플랫폼의 대두와 같은 극도의 자본 집약형 기업의 부각으로 인해 소득재분배(Trickle-down effect)의 기능부전에 대해 정부가 직접 개입하려는 움직임
- 그 대표적 예로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7월에 이례적으로 독점금지법을 강화하는 경쟁촉진에 관한 행정명령 발표<sup>11)</sup>
  - 여기에서 “연속적인 합병, 신흥 경쟁업체 인수, 데이터 집약, 주목 시장의 불공정한 경쟁, 사용자 모니터링, 네트워크 효과 존재에 기인하는 인터넷 플랫폼의 대두 등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독점금지법을 집행한다”고 표명
  - 여기에서는 기업합병뿐 아니라 고용의 유동화도 대상으로 하여 법의 집행을 강화하면서 대기업에 대한 징세 강화와 자유시장의 정비를 도모

7) US White House(2023.7.28), Executive Order on Federal Research and Development to Support Domestic Manufacturing and American Jobs

8) US White House(2023.8.9), Executive Order on Addressing United States Investments in Certain National Security Technologies and Products in Countries of Concern

9) U.S. Department of Commerce(2023.12.21), Commerce Department Announces Industrial Base Survey of American Semiconductor Supply Chain

10) U.S. Department of Commerce(2024), FACT SHEET: President Biden Takes Action to Protect American Workers and Businesses from China's Unfair Trade Practices

11) 그러나 관련 법안은 의회에 법안으로 상정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아 산업조직 정책은 실효성이 없었다고 판단됨

## III.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산업정책

### ● 바이든 행정부는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 새로운 대규모 투자를 추진한다는 선거 공약 실천으로부터 출발

- ‘더 나은 재건 계획’이라고 명명한 미국 구제 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 2021), 미국 고용 계획 구상(→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 미국 가족 계획 구상(→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내걸고 적극적 산업정책 추진
-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인 3법이라 하여 2021년 인프라 투자·고용법과 CHIPS법,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표현되는 산업정책을 잇달아 추진

### 1 3대 입법 산업정책

#### 가. 인프라 투자·고용법(IIJA)

### ● 미국 고용계획 구상과 인프라 투자·고용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IIJA)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본격적 산업정책으로 추진된 대규모 인프라 투자

- 미국 고용계획 구상에서는 인프라 투자와 함께 환경정책, 국내 제조업 공급망 강화, 중소기업 지원 및 기타 연구개발 혁신 등에도 대규모 투자를 포함하여 당초 2.6조 달러로 제안
  - 미국에서 오랜 과제가 되고 있던 노후 인프라인 도로, 교량, 항만, 수도 등과 IT 인프라인 광대역 투자, 병원·학교 건설 등의 사회적 인프라 정비에 대규모 투자 추진
  - 동시에 조세 공제에 의한 청정에너지 투자 유도, 제조업 지원, 중소기업 지원, 기타 연구개발·혁신에도 대규모 투자 추진
- 그러나 의회에서 공화당의 반대로 이후 1.2조 달러의 투자 규모로 인프라 투자 중심으로 축소되어 최종적으로 인프라·투자 고용법으로 확정
  - 환경 정책 투자, 국내 제조업 공급망 강화, 중소기업 지원, 기타 연구개발 및 혁신 지원 정책 등은 다른 정책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 존재
  - 또한 의료보조, 병원·학교건설 등의 인적자본 투자정책 등은 당시 공화당이 합의할 수 없는 ‘큰 정부’로 간주되는 정책

[그림 3] 인프라투자고용법의 미국고용계획 대비 예산 축소

미국고용계획(당초안, 2022.3)		인프라투자고용법(2022.11)	
● 교통인프라 정비	6,210	● 수송 부문 인프라 정비	2,836
· 노후화 다리, 도로 정비	1,150	· 도로, 교량 정비	1,100
· 교통시설 현대화, 트럭 정비	1,650	· 여객 및 화물 철도 정비	660
· 보조금 및 세제우대 등 EV 보급 지원	1,740	· 공공교통 정비	392
· 공항·항만 정비	420	· 공항 정비	250
● 생활인프라 정비	6,500	· EV 인프라, 저배출차 정비	150
· 클린에너지 추진의 전력망 정비	1,000	· 항만·수로 정비	174
· 수도시스템 정비	1,110	● 비수송 부문 인프라 정비	2,655
· 고속 통신망 정비	1,000	· 전력그리드망 정비	730
· 저가격 주택 정비	2,530	· 통신광역망 정비	650
· 공립학교 정비	1,000	· 수도인프라 정비	540
● 제조업 경쟁력 강화	5,800	· 복원력, 사이버보안	460
· 공급망 강화	3,000	· 기타	335
· AI 등 연구개발 지원	1,800	합계	5,500
· 노동자 능력개발 프로그램 지원	1,000		
● 고령자·장애인시설, 퇴역군인 병원정비	4,000		
합계	22,510		

출처 : JETRO(2023.7), 바이덴 政權의 政策

### 나. 미국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 미국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은 미국 상원의 미국혁신경쟁법(USICA)과 하원의 미국경쟁력강화법(America COMPETES Act)이 1년여의 양원 및 양당의 조정과정을 거쳐 CHIPS법으로 바이든 대통령 서명 후 공표(2022.8)

- 2021년의 미국혁신경쟁법은 과학기술투자 추진을 목적으로 심의되던 무한프론티어법(Endless Frontier Act)에 새로운 혁신·경쟁력 정책 관련 복수 법안을 결합한 것임
  - 전미과학재단(NSF)에 기술·이노베이션 부문을 설치해, 인공지능, 고성능·컴퓨팅, 선진 제조업 등의 주요 기술 중점 분야의 기초 연구를 강화해 미국의 우위성을 유지·강화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러한 기술을 미국 내 기업에 이전해 상업화하려는 취지
  - 이 법안은 상기 중요 기술에 있어서 국제경쟁력 유지 강화를 통해 대중전략 경쟁을 강하게 의식
  - 예산 규모는 총 2,500억 달러로 NSF에 810억 달러, 에너지부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170억 달러, 그 외도 포함 연구개발이나 혁신 투자 전체에 1,900억 달러, 주목받은 반도체 연구개발, 반도체 생산 기반과 공급망 강화에 520억 달러 할당

- 하원에서는 미국혁신경쟁법안과 유사한 경쟁력강화법안 심의
  - 이 법안은 예산 규모 3,500억 달러, 2021년 미국 혁신·경쟁법안과 유사한 내용과 함께 대중투자·무역규제, 플랫폼 규제나 무역 조정지원조치(TAA) 등의 내용 포함
- 이어 상하원 협의 과정에서 대중 투자규제조항의 유무와 민주당이 중시하는 정책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논란을 벌인 이후 미국 반도체 및 과학법으로 합의에 이룸
  - 합의된 법안에서는 플랫폼 규제나 TAA 등 민주당이 중시하나 공화당이 반대하는 대립요소가 삭제된 뒤 초당파적으로 합의가 예상되는 대중전략 경쟁 정책의 핵심 부분인 반도체 산업정책을 전면에 설정 (예산 규모는 원래보다 축소된 약 2,800억 달러)

[그림 4] 반도체 및 과학법 개요

항목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의 투자 계획. 산업계에 직접 제공하는 반도체 보조금(빨간색 테두리)의 운용이 주목됨</li> <li>●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유념국에서의 반도체 관련 투자에 대해 10년간 제한을 받는 것에 합의해야 하며, 중국을 염두에 둔 가드레일(Guard Rail) 조항을 설정</li> </ul>	
상무부 인센티브 (390억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도체의 설계, 조립, 시험, 첨단 패키징, 연구개발을 위한 국내시설 및 장치의 건설, 확장 또는 현대화에 대한 자금 지원</li> <li>• 이 중 60억 달러는 직접 용자 또는 용자보증으로 사용 가능</li> </ul>
상무부 연구개발 (110억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무부 관할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예산 총당</li> </ul>
기타(270억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력 개발과 국제적 반도체 공급망의 강화 정책에 예산 총당</li> </ul>
세액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도체 제조에 관한 투자에 대한 25%의 세액 공제를 도입</li> </ul>
과학기술 관련 연방정부기관의 예산 총당 (약 2,000억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부, 상무부, 국립과학재단(NSF),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연방정부기관의 연구 개발 프로그램 등에 약 2,000억 달러를 총당</li> </ul>

- CHIPS 법의 핵심 목적은 중국과의 경쟁에 있어서 핵심 분야 중 하나인 미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 설치와 인재 육성을 포함한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 연방 정부의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 투자촉진, 반도체의 국내 생산기반 재구축, 동맹국을 포함한 공급망 강화
  - 중국에 입지하는 반도체 생산 거점의 프로세스 제한 등 중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억제하려는 정책

- 520억 달러의 미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설비 투자액의 25%에 달하는 조세 공제, 반도체 생산 설비 신설·증설 유도, 동맹국 반도체 기업의 미국 유치 인센티브, 기타 연방 정부 부처의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 및 관련 정책 투자

## ● CHIPS에 의한 재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자원계획에 따른 주요 내용의 지침을 따라야 함<sup>12)</sup>

- 인센티브 신청 시 제출 내용에는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과 미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목표와의 연계성, 금융 정보, 기술적 타당성, 지속가능성 등을 포함해야 함
  - 보상 대상 인센티브 : 주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적격 대상 인센티브가 제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신 제출, 인센티브의 예상 규모 및 성격 명시 필요
  - 프로젝트 개요 : 시설 위치, 인프라, 각 시설에서 생산하거나 생산할 제품, 최종 시장 판매 제품 및 해당 제품의 상위 10대 고객, 생산 규모, 각 세부 프로젝트의 상호 관련성, 프로젝트의 미국 경제 및 국가안보 목표와의 연관성 등 프로젝트 개요
  - 신청인 프로필 : 자회사, 중간 법인, 최종 모기업까지 포함하여 기업 운영 제반
  - 미국 경제 및 국가안보 목표와의 연계성 : 미국 내 민간 투자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여 해당 프로젝트가 미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목표를 충족하는지에 대한 설명. 특히, 사이버 보안, 공급망 복원력 및 리스크 관리, 해외 통제 측면에서 프로젝트의 사업 지속성
  - 거래 전략 : 각 프로젝트에 대한 고객 및 시장 수요, 물량 및 가격 변동, 경쟁 포지셔닝, 공급 역학 등에 대한 거래 전략
  - 금융 정보 : 자금 출처 및 용도, 프로젝트 비용, 자본 출처 등 재무 계획
  - 프로젝트의 기술적 타당성 : 각 프로젝트에 대한 기초 기술 및 제조 공정의 실행 가능성, 환경 검토 절차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 조직 정보 : 모회사, 자회사, 계열사 및 기타 관련 법인에 대해 법인 구조, 프로젝트 관리 감독 및 관리에 대한 접근 방식, 과거 프로젝트 이력,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 규정, 소송 및/또는 분쟁 관련 내용, 고문 및 핵심 파트너에 대한 정보
  - 인재 개발 계획 : 전반적인 인력 체계, 경제적 약자를 위한 고용 기회 확대 프로그램, 평등한 고용을 위한 채용 정책 수립 및 인재 교육 프로그램 계획. 한편, CHIPS 직접자금을 1억 5천만 달러 이상 신청하는 신청인들은 아동 돌봄을 위한 접근 가능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 포함
  - 기타 파급 효과 :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재투자 전략과 그 규모, 환매 약정에 대한 내용, 반도체 연구 개발에 대한 지원, 공급업체 다양화 계획, 기후 및 환경 책임, 커뮤니티 투자 계획. 특히, 미국 내에서 생산된 철강제품, 건축 자재 등의 활용 여부와 그 방법에 대한 설명 및 계약조건 포함

12) Bae, Kim & Lee LLC(2023.3.13.), 미국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의 제조시설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세부계획

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 이 법은 이전에 제시된 미국 가족계획(American Families Plan) 구상과 그 연장선에서 논의된 더 나은 재건법(Build Back Better Act, BBB)안의 내용이 통합되어 성립**

- 미국 가족계획구상은 아동 무상교육과 저소득자 대학 진학지원 등 인적자본투자의 성격으로 노동자·실업자 지원과 그 재원으로서의 법인세 증세 내용을 포함
- 이 구상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 구제법의 의료 보험 보조 기한 연장, 미국 고용 계획 구상의 삭제 부분(환경 정책 투자와 인적 자본 투자)이 통합되어 BBB안으로 상정
- 이후 이 법안에 대해 환경정책 투자 액수 규모가 너무 크다는 반대의견으로 인해 조정이 이루어지고 인플레이션 대책이 내용이 포함되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성립

**●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전기차 및 배터리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한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

-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에는 중국 뿐 아니라 EU, 한국 등의 적극적인 산업정책으로 인해 보조금 경쟁이 보다 치열한 분야로서 미국은 자국 기업을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임
- 또한 이 법은 미국의 그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공약의 실현이라는 의미가 있음

**●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청정 에너지 투자 유도를 위한 조세 공제 등 환경 정책 투자, 의료 보험 보조 연장, 대기업 과세 강화 등의 내용이 통합되어 있음**

- 환경 투자 유도 정책으로는 5~9년간 3,690억 달러의 전기자동차 조세 공제, 클린 에너지용 인센티브, 원자력, 수소 연료, 대체 연료 등의 조세 우대 조치 제시
- 이 법은 인플레이션 대책 명목으로 담은 대기업 과세 강화도 포함하기 때문에 약 3,000억 달러의 증세를 목표
- 이 법은 민주당이 상하 양원에서의 수적 우위를 기반으로 신속하게 통과시킴
  - 상원에서는 찬성 50 대 반대 50이었으나 동률일 경우 민주당 소속의 해리스 부통령이 결정권을 가지게 되는 구조 속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찬성투표로 통과하였고, 하원에서 민주당 우위로 찬성 220 대 반대 213으로 통과
  - 이 법에 포함된 환경정책 투자, 의료보험 예산, 약가 억제조치에 따른 대기업에 대한 실효세율 15% 담보 등의 과세 강화 내용에 대해 공화당 반대

[그림 5] 인플레이션 감축법 성립

세출액 항목	BBB① 3.5조 달러	BBB② 1.75조 달러	인플레이션 감축법 4,330억 달러
클린 에너지와 기후 변화	6,180억 달러 - 클린에너지 세액공제: 2,730억 달러 - 공기, 물, 에너지 효율에 투자: 1,950억 달러 - 청정전기 프로그램: 1,500억 달러	5,550억 달러 - 클린에너지 세액공제 (EV 세액공제 포함): 3,200억 달러 - 복원력 투자: 1,050억 달러 - 클린에너지 기술 등에 투자와 인센티브: 1,100억 달러 - 클린에너지 조달: 1,500억 달러	3,690억 달러 - 클린카 세액공제(중고차 4,000달러, 신차 7,500달러): 75억 달러 - 클린 기술 제조시설 건설을 위한 투자세액공제: 100억 달러 - 자동차 제조시설을 클린카 제조시설로 개조하기 위한 보조금: 20억 달러 등
의료 보험	5,100억 달러 - ACA 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2,100억 달러 - 시력·청력·치과 치료를 대상으로 한 메디케어: 3,000억 달러	1,650억 달러 - ACA 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1,300억 달러 - 청력을 대상으로 한 메디케어: 350억 달러	640억 달러 - ACA 프로그램의 2025년까지 연장: 640억 달러 ※ 기타 세입항목으로서 처방전 약가 인하 설정: 2,880억 달러
자녀, 가족, 간호	2조 달러 - 어린이 돌봄과 무료 학교: 4,650억 달러 - 재택 의료: 1,500억 달러 - 아동 및 저소득자 세액공제 확대: 6,910억 달러 - 유급휴가 부여: 5,000억 달러 등	7,500억 달러 - 어린이 돌봄과 무료 학교: 4,000억 달러 - 재택 간호: 1,500억 달러 - 아동 및 저소득자 세액공제 확대: 2,000억 달러	×
기타	1조 4,000억 달러 - 주택, 고등교육, 신규 메디케이드, 인프라 세액공제, 학교 인프라 등	2,800억 달러 - 주택, 고등교육, 기타 투자	×

출처 : JETRO(2023. 7), 바이덴 政權의 政策

● IRA의 중요 내용인 보조금과 관련된 규정의 핵심은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태양광, 풍력 등)의 미국 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친환경차 세액공제조항, 첨단 제조생산 세액공제, Capex 지원금의 3가지 규정<sup>13)</sup>

-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은 친환경차 세액공제조항(IRC 섹션 제30D), 중고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IRC 섹션 제25E),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조항(IRC 섹션 제45W)으로 구성
  - ※ 내국세법(IRC, Internal Revenue Code)
    -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제조된 것이어야 하고, ▶2024년부터 외국우려실체(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FEOC)가 제조 또는 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면 안되고, ▶2025년부터 FEOC가 추출·가공·재활용한 핵심 광물이 들어간 배터리를 포함해서는 안됨
    - 단, 상업용 친환경차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고, 미국으로의 수출 가능

13) 삼일회계법인(2024.3), 인플레이션 감축법 해외우려기관(FEOC) 지침발표에 따른 영향 점검



- 첨단 제조생산 세액공제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내에서 생산하여 미국 내에 판매하는 경우 세액 공제 부여
  - 적용 대상 : 2022년 12월 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되고 판매된 제품에 적용
  - 적용 시기 :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적용
  - 대상 품목 :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핵심 광물
- 자본 지출(Capex, Capital Expenditure) 지원금은 핵심광물 및 핵심소재를 대상으로 청정 에너지 관련 기술 제품 제조시설이나 탄소감축 및 에너지 효율 설비 시설인 경우 지원

#### 라. 3대 입법 산업정책의 집행

#### ● 반도체 및 과학법의 제정 이전부터 본 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에서 제조 능력을 늘리기 위한 여러 프로젝트를 발표

-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에 의하면, 동 법의 논의가 시작된 2020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발표된 투자계획은 25개주, 총 83건의 4,470억 달러에 달함<sup>14)</sup>
- 이러한 프로젝트에는 다양한 반도체 부문(예 : 첨단 로직, 메모리, 아날로그, 레거시 칩)의 신규, 확장 또는 업그레이드된 팹, 반도체 장비 시설, 칩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시설을 포함

#### ● 미국 백악관은 IIJA와 IRA에 대해 태양광, 풍력, 계통 축전, EV를 포함한 클린 경제 구축의 내용을 발표<sup>1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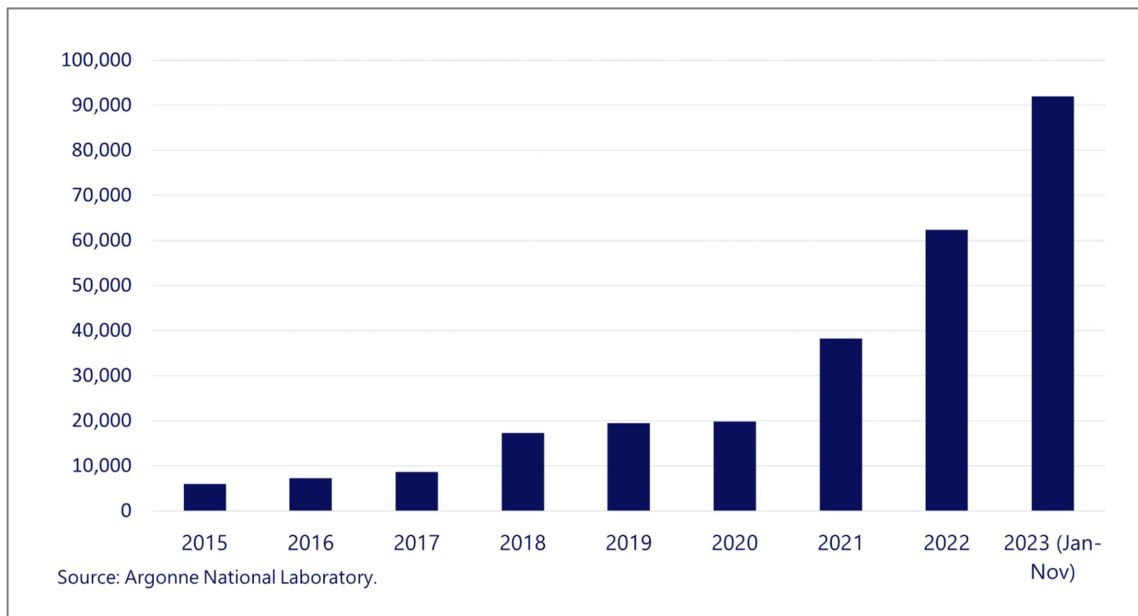
- 2021년 1월 이후 민간 기업은 청정 에너지 제조, EV 및 배터리, 발전에 대한 약 3,600억 달러를 포함하여 클린 에너지에 5,000억 달러 이상의 신규 투자를 발표
- 제조 능력에 관하여 IRA의 발효 이후, 태양광 발전 모듈의 조립 능력에 대해 100기가와트(GW) 초과에 상당하는 투자 계획 발표
  - 이는 연간 미국내 10% 이상의 가정에 전력을 공급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는 것으로, 이는 79개의 새로운 시설 및 그 확장과 13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뜻함
  - 또한 풍력에너지의 경우 투자 확대를 통해, 미국 에너지 정보청의 최신 연간 에너지 전망에 따르면 2030년에 300기가 와트의 풍력터빈 용량을 확보할 전망

14) SIA(2022.12.14), The CHIPS Act Has Already Sparked \$450 Billion in Private Investments for U.S. Semiconductor Production

15) US White House(2023.12.19), Building a Thriving Clean Energy Economy in 2023 and Beyond

- 이와 관련, 기업들은 2021년 이후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제조에 1,500억 달러를 넘는 투자계획을 발표
  - 전기자동차 조립 및 EV 구성 요소 또는 충전기 제조를 위한 150개 이상의 공장 신규 건설 및 확장과 100만 개 이상의 충전소 구축 계획
  - EV 판매는 2026년 이후 판매가 매년 100만 대를 넘어, 2030년에는 연간 180만 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그림 6] 전기자동차 미국 시장 월별 평균 판매량 추이



출처 : US White House(2023), Building a Thriving Clean Energy Economy in 2023 and Beyond

## 2 통상정책

## 가. 관세 정책

-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협력을 중시하고 동맹국에 대해서는 갈등 조정을 위해 관세 조치를 일부 완화하는 방식으로 대응**
  -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수입에 대한 추가 관세와 관련하여, 유럽연합(EU)에 대해서는 2022년 1월부터, 영국 및 일본에 대해서는 4월부터, 일정 수량까지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관세율쿼터(Tariff Rate Quota, TRQ) 제도 도입
  -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2023년 3월에 종료된 세탁기용 세이프가드 조치 이외에 기존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232조 적용 유지
-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와 관련하여, USTR은 2022년 5월 이후 미 국내 산업계로부터 요청을 받아 ‘목록1’과 ‘목록2’의 계속을 결정<sup>16)</sup>**
  - 원래 발동으로부터 4년간 유효하며, 만료 전 마지막 60일 간에 보복 조치에 의한 혜택을 받는 국내 산업계로부터 계속 요청이 없으면 종료하게 되어 있음
    -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된 1, 2차 제재 관세는 2022년 7월 6일과 8월 23일에 만료 시한이 지났으나 업계의 요구를 받아 목록1과 목록2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
  - ‘목록 3’과 ‘목록 4A’에 대해서는 재검토와 그 합법성에 관련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에서의 소송이 계속되고 있음
- **USTR은 2024년 5월 14일 재검토 결과와 함께 301조에 따른 대중 추가 관세 조치를 공표**
  - 중국으로부터의 전기자동차 수입의 관세율을 현행의 25%에서 100%로 대폭 끌어올리는 것 외에 EV용 배터리, 태양광 패널, 철강·알루미늄 제품,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율을 대폭으로 인상
  - 실제 미국 내에서의 중국제 EV의 유통은 미미하고, 중국의 대미 수출에 차지하는 대상 품목의 비율은 4.2% 정도에 불과

16) USTR(2022), China Section 301-Tariff Actions and Exclusion Process

〈표 4〉 바이든 행정부의 최근 대중 추가 관세 조치

품목	현행	변경후	실시시기
전기자동차(EV)	25%	100%	2024.8.1
리튬이온 배터리(EV용)	7.5%	25%	
전자부품(비리튬이온 전지)	7.5%	25%	
태양 전지(패널로 조립된 것 포함)	25%	50%	
철강·알루미늄 제품	0~7.5%	25%	
기타 중요 광물	0%	25%	
항만 크레인	0%	25%	
개인용 보호구(PPE)(인공호흡기·마스크 등)	0~7.5%	25%	
주사기와 침	0%	50%	
반도체	25%	50%	
리튬이온 배터리(비EV 용)	7.5%	25%	2026.1.1
의료용 장갑	7.5%	25%	
흑연·영구자석	0%	25%	

출처 : USTR(2024.5.14), Four-Year Review Of Actions Taken In The Section 301 Investigation: China'S Acts, Policies, And Practices Related To Technology Transfer, Intellectual Property, And Innovation

## 나. 수출 관리

### ●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행정부의 방침을 이어 수출 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미국 내, 동맹국 또는 파트너국으로부터의 안정적 조달을 도모

- 2021년 2월, '미국 공급망에 관한 행정명령(14017호)'에 근거해, 동년 6월에는 반도체, 대용량 축전지, 희소 금속, 의약·의료품 공급망의 문제점과 그 대응·강화책을 정리한 보고서를 공포<sup>17)</sup>
  - 이 보고서에서는 반도체 등 주요 4개 분야에서 미 정부의 적극적인 관여 필요성을 언급하며 공급망 강화를 위한 민간 협력체제·프로젝트 구축과 추진, 기술개발을 포함한 각 프로젝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동맹·우호국과의 협력 체제 강화 등을 제언
- 이후 2022년 10월, 중국을 염두에 두고 반도체 관련 제품(물품·기술·소프트웨어)의 수출 관리 규칙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후속 조치를 시행<sup>18)</sup>

17) US White House(2021.2.24.), Executive Order on America's Supply Chains, US White House(2021.6.4.), Building Resilient Supply Chains, Revitalizing American Manufacturing, And Fostering Broad-Based Growth

18) US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2024.4.4.), Commerce Releases Clarifications of Export Control Rules

- 강화된 수출관리 규칙에 따르면, 미국 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은 10년간 중국을 포함한 '우려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의 확장이 제한되는,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에 따를 것을 요구
- 반도체 관련 제품의 수출 관리와 관련, 2023년 10월에 수출 관리 대상 반도체 제조 장치 종류의 확대나 우회 리스크에 대처하는 추가 조치가 취해졌고, 2024년 4월에는 보다 명확한 중국용 반도체 관련 수출관리규칙을 공표

[그림 7] 바이든 행정부 대외정책 기초 : 설리번 기초연설 개요(2023.4)

<b>4 대 과 제</b>	<b>1</b>	시장원리의 과신에 의한 국내산업기반의 공동화
	<b>2</b>	경제통합가설과 다른 지정학적·안전보장상의 경쟁에 의한 새로운 환경
	<b>3</b>	경제성장 억제 요인인 기후위기와 에너지 이행
	<b>4</b>	낙수효과와 경제정책에 의한 불평등과 민주주의 손상
<b>바이든 행정부의 산업·혁신 전략</b>		
①미국 경제력과 기술력의 원천에 투자, ②다양하고 강인한 글로벌 유통망을 촉진, ③노동·환경·기술·거버넌스 등에서 높은 기준 설정, ④기후와 건강의 공공재를 실현하기 위한 자본 투입시장		
<b>5 대 조 치</b>	<b>1</b>	현대적 산업전략으로 새로운 기반을 구축
	<b>2</b>	파트너 국가와 제휴하여 미국내외 유사한 역량, 강인성, 포함성을 구축
	<b>3</b>	관세 감축을 주요 과제로 했던 전통적 무역협정에서 전환하여, 현재의 핵심적 과제에 초점을 둔 혁신적으로 새로운 국제경제 파트너십으로 이행
	<b>4</b>	다국간 개발은행 등을 활용하여 신흥국에 투자
	<b>5</b>	'작은 정원과 높은 울타리' 정책에 의해 기반 기술을 보호

출처 : Jake Sullivan (2023.4.27.), "Remarks by National Security Advisor Jake Sullivan on Renewing American Economic Leadership at the Brookings Institution"

<표 5> 수출관리규정(ERA) 최근 개정의 적용 대상 품목의 범위

ERA의 적용을 받는 특정 품목의 범위	
①	미국 내에 존재하는 모든 품목
②	모든 미국산 품목 (소재지 불문)
③	미국산 상품·기술·소프트웨어가 최소편입비율 기준(De minimis Rule)을 초과해 편입된 외국인 품목
④	특정 미국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를 직접 사용해 생산된 외국인 직접제품(Direct Product)
⑤	특정 미국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의 직접제품 설비를 갖춘 해외 플랜트에서 생산된 외국인 품목

출처 : 산업연구원(2024.5), 미국의 포괄적 경제안보조치에 따른 향후 전망과 산업정책 과제

to Restrict the PRC's Access to Advanced Computing and Supercomputing Items and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 다. 미국 주도의 통상 질서 체계 IPEF

### ●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5월,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라는 새로운 인도 태평양 경제권 질서 체계를 제안

- IPEF는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으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적 관여를 높이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
- IPEF에서는 모두 14개국이 참가하고, 무역, 공급망 회복력, 청정 경제, 공정 경제라는 4개의 주요 핵심 협력 분야를 제시
  - 참가국 : 미국,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한국, 싱가포르, 태국, 일본, 뉴질랜드, 피지, 필리핀,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 ● IPEF는 2022년 9월부터 협상이 진행되었고, 2023년 11월에 각료회의와 정상회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타결된 후 2024년 6월에 IPEF 무역장관회의에서 최종 합의문에 서명

- IPEF 무역 분야의 협상은 잠정 중단된 것이고 참여국들이 2024년에 이 분야의 협상을 지속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음
  - 무역 분야의 협상이 중단된 원인은 노동의 경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강력한 노동과 환경 기준의 수용을 유보했고, 디지털 무역의 경우 데이터 이동과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
- 공급망 협력에 대해 참여국들은 공급망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불필요한 제한의 제거, 공급망 관련 법·규제의 공개,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비즈니스 매칭 및 투자 등에 합의
  - 그 외에 노동권을 보장하는 공급망 회복력 향상, 국가 안보, 보건 등에 핵심 물품의 지정, 데이터 기반의 공급망 취약성을 모니터링하는 데 합의
- 청정경제와 관련하여, 참여국들은 공유된 기후 목표와 넷제로(net zero emission) 경제로 가는 각국 경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모든 참여국들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법적 및 규제적 프레임워크를 강화하기로 함
- 공정경제와 관련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의 무역 및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의 공정성, 포용성, 투명성, 법치주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함
- IPEF 전체의 운영에 관한 협정(PEF 협정)의 협상도 타결
  - IPEF의 집단적인 작동을 원활하게 하고자 각 참여국 장관급 대표로 구성된 연례 IPEF 위원회(IPEF Council)를 설치하고, IPEF 위원회는 IPEF 합의의 공동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IPEF 합의 수정, 새로운 회원 가입을 결정

〈표 6〉 IPEF 교섭 결과 개요(2024년 6월 6일 기준)

합의 분야	주요 내용	협상 결과	발효
무역 (Pillar I)	디지털 무역, 농업, 무역원활화 등	협상중단	-
공급망 회복력 (Pillar II)	공급망 안정 공조	타결 및 서명 (2023.11.16.)	2024.2.24
청정경제 (Pillar III)	청정 에너지 이동, 청정 에너지 공급망	타결 및 서명 (2024.06.06.)	비준/발표 대기
공정경제 (Pillar IV)	반부패, 조세 투명성, 노동권 보호	타결 및 서명 (2024.06.06.)	비준/발표 대기
IPEF 운영 합의	IPEF 운영 제도	타결 및 서명 (2024.06.06.)	비준/발표 대기

출처 : 강선주(2024),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최종 합의: 미국의 새로운 무역 패러다임의 투영과 합의 분석,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 3 대내외 투자 규제

#### ● 미국 국내 투자 규제와 관련,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전의 흐름을 계승하여 2022년 9월에 행정명령을 통해 CFIUS 심사에서 특히 중시하는 항목을 제시<sup>19)</sup>

※ CFIUS(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 미국에서의 외국인투자심사를 위한 위원회

- CFIUS는 미국에 대한 외국 투자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지 심사하는 부처 간 위원회로서 필요에 따라 거래를 차단할 권한을 보유
  - 국가안보의 확실한 정의는 없고, 심사대상이 되는 거래의 판단은 CFIUS에 맡김
  - 미국의 대내투자심사에서의 국가안보의 정의는 종종 안보환경이나 정치적 요인에 따라 변화
- 특히, 방위 산업 기반에서 공급망의 회복력과 보안에 미치는 해당 거래의 영향을 고려하여 심사해야 하는 중요 기술을 강조
  - 중요기술은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인공지능(AI), 바이오테크놀로지와 바이오제조, 양자컴퓨팅, 첨단 청정에너지(예 : 배터리 저장 및 수소), 기후적응기술, 중요소재(예 : 리튬 및 희토류 원소), 식량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농업 산업 등

19) US White House(2022.9.15), Executive Order on Ensuring Robust Consideration of Evolving National Security Risks by 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 CFIUS는 미국의 산업 안보에 중요한 외국인 투자를 심사하는 것이 주요 과제인데, 최근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발표에 대해 미국 연방의회의 일부 의원 등이 CFIUS 심사를 통해 인수 금지할 것을 요구한 것이 주목할 만한 사례
  - 일본제철은 US 스틸 인수가 중국 견제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전 미 국무장관을 영입하는 등 적극적인 인수 입장 표명
  - 이에 대해 미국 내에서는 차기 대선주자들이 모두 반대하고, 전미철강노조도 강력히 반대하는 것이 주된 의견이나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국 제조생산 역량 강화, 프렌드쇼어링 등 미국 우선 정책과 부합한다는 지적도 있음

**2023년 8월, 반도체·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양자 정보 기술, 인공지능(AI), 3개의 기술 영역 대상 중국에 대한 대외 투자 규제의 행정명령 발표<sup>20)</sup>**

- 규제 대상이 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를 의무화하고 더욱 심각한 위협이 있는 경우는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
  - 기존 수출 관리의 범위 밖에 있는 첨단기술 등의 유출을 막으려는 의도

〈표 7〉 우려국 해외투자 제한 핵심 분야 세부 요건

핵심 분야	세부 기술	사전 신고	거래 금지
① 반도체 및 마이크로 전자	전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반도체 제조 장비, 첨단 집적회로 제조 기술, 슈퍼컴퓨터 설치 또는 판매	○	○ (일부 고급 기술·제품)
② 양자 정보 기술	양자컴퓨터 및 센서를 포함한 특정 구성품 생산 기술, 양자 네트워킹 기술, 양자통신 시스템	×	○
③ 인공지능 시스템	군사 또는 정보 작전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 (특정 최종용도)	×

출처 : 산업연구원(2024.5), 미국의 포괄적 경제안보조치에 따른 향후 전망과 산업정책 과제

- CSET가 2023년 2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주요 반도체 대기업이 소유한 VC가 중국의 AI 산업에 지원해 온 사례를 제시<sup>21)</sup>
  - 2015년에서 2021년 사이 중국 AI 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 형태에서 VC가 차지하는 비중이 91%에 이룸

20) US White House(2023.8.9), Executive Order on Addressing United States Investments in Certain National Security Technologies and Products in Countries of Concern. 한편, 그 이전에 미국 연방 의회에서 2022년 5월 하원에서 그 규제 대상이 해당 행정명령보다 광범위한 규제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국가 중요 능력 방위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연방 의원 간에 그 규제 범위나 방법론에 의견의 차이가 있어 가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있었음

21) CSET(2023.2.16), U.S. Outbound Investment into Chinese AI Companies



[그림 8] AI 분야 미국 투자자의 중국 기업 투자 사례

투자 유형	거래 금액 (백만달러)	거래건수	비율
VC (Angel/seed/pre-seed)	\$950	103	25.7%
VC (Early stage)	\$6,670	203	50.6%
VC (Late stage)	\$14,348	58	14.5%
Private Equity	\$8,400	10	2.5%
Exit stage (IPO/M&A)	\$391	8	2.0%
Unknown	\$9,475	19	4.7%

출처 : CSET(2023.2), U.S. Outbound Investment into Chinese AI Companies

#### 4 기타 전략 산업 정책

### ● 미국 상무부는 2022년 3월에, 2022~2026년도의 혁신과 국제경쟁력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5가지 중점 내용을 제시하는 전략 계획 발표<sup>22)</sup>

- 혁신과 국제경쟁력 촉진 : 강인한 공급망에 대한 투자, 신흥·기반 기술 추진, 동맹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사이버 보안 개선, 지식재산권 촉진, 통상 규칙 적극적인 집행을 통해 실현
- 포용적 자본주의와 공정한 경제성장 촉진 : 모든 미국인에게 효과적인 경제를 제공하고, 광대역 및 경제 개발에 대한 투자를 통해 미국 기업을 지원
- 기후위기 대응 : 기후변화 관련 데이터 수집·보급을 추진하는 기술의 가속과 환경의 복원 등에 대한 투자에 의해 기후변화에 대응함과 동시에 고임금의 고용 창출
- 데이터를 통한 기회와 발견 확대 : 세계 수준의 과학 및 통계 도구를 활용하여 미국 노동자와 비즈니스를 위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창출
- 21세기의 능력으로 21세기의 서비스를 제공 : 상무부의 채용·조달에 스마트 기술의 도입과 시스템 쇄신을 도모하는 것으로, 13개국을 통해, 미국민과 비즈니스에 기여하는 결과 달성

22) U.S. Department of Commerce(2024), 2022-2026 Strategic Plan

●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5월에 핵심·신흥기술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표준전략을 발표<sup>23)</sup>**

- 이 전략은 글로벌 사회에서 확대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고, 공정하고 투명하며, 글로벌 혁신과 경쟁을 보장하는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
- 주요 기술 부문에서 미국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자국 연구생태계의 지속적인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세부 목표와 방안들을 명시
  - 투자, 참여, 노동력, 공정성과 포용성의 4대 목표와 8대 실천방안 제시

※ ①CET 표준개발 투자 증대, ②위험·보안·회복탄력성을 위한 지원 확대, ③국제표준 개발의 민간 부문 참여 장벽 제거, ④공공-민간 부문의 소통 개선, ⑤동류 국가와 파트너십 강화, ⑥새로운 표준 업무 인력 교육 및 강화, ⑦동맹국과의 파트너십 및 협력 강화, ⑧표준개발의 광범위한 참여 촉진

〈표 8〉 미국 핵심신흥기술 표준 전략의 8대 기술 분야

기술 분야	활용 분야 및 경제·안보적 파급력
통신 및 네트워크	· 소비자 및 기업, 정부가 상호 작용하는 기존 방식에 극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통신 및 네트워크 기술
반도체 및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 글로벌 경제, 사회 및 정부의 모든 구석에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혁신과 역량을 지원하는 기술
인공지능·머신러닝	·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기술과 과학적 혁신을 이루어 리스크가 관리되는 방식으로 개발되어야 하는 기술
생명공학 기술	· 모든 국가의 보건, 농업 및 산업 부문에 영향을 미칠 기술 · 국가, 시민, 건강한 생태 환경을 지원하는 기술
위치·항법·시각(PNT)	· 전력망, 통신, 인프라 및 모바일 장치, 모든 교통 수단을 포함하는 기술로서 비상 대응 가능
디지털 인증 인프라 및 분산원장 기술	· 다양한 주요 경제 부문에 점점 영향력이 확대 중
청정에너지 발전·저장	· 에너지의 생성, 저장, 분배, 기후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 에너지 생산 시설의 기술 보안에 중요
양자정보 기술	· 양자 역학을 활용하여 주요 국가 안보 및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정보의 저장, 전송, 조작 또는 측정에 활용

출처 : USTR(2024.5.14), Four-Year Review Of Actions Taken In The Section 301 Investigation: China'S Acts, Policies, And Practices Related To Technology Transfer, Intellectual Property, And Innovation

● **미국 국방부는 2024년 1월에 미국 최초로 '방위산업'을 포괄적으로 다룬 전략문서인 '국가방위 산업전략(National Defense Industry Strategy, NDIS)'을 공표<sup>24)</sup>**

- NDIS는 미국 적대 세력을 억제하고 현대적이고 회복력 있는 방위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장기적인 국방부 조치와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제시

23) US White House(2023.5), United States Government National Standards Strategy For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

24) US Department of Defense(2024.1), National Defense Industrial Strategy

- NDIS에서는, 대처해야 할 중점 영역으로서, ①강인성 있는 공급망 구축<sup>25)</sup>, ②방위 산업의 인재 확보, ③유연한 방위 조달, ④경제 역제력을 제시
  - NDIS에서는 ‘생산의 비용, 속도, 규모의 삼자 간에 발생하는 상충 관계를 어떻게 극복하는가’의 문제를 다루며, 이것들을 극복하는 21세기형의 방위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설정
  - NDIS에 근거하여 이후에 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은 정책이 발표될 예정
- 이외에도 생성 AI와 크리에이터 경제에 관한 규제, AI에 의한 개인 정보 혹은 저작권 침해의 문제 및 지배적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추진 중**
- 생성 AI 규제 내용을 제시한 보고서에서는 AI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공중 이익 혹은 저작권 등 침해와 생성 AI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규제정책을 제시<sup>26)</sup>
    - 이 보고서는 ①생성 AI 모델의 정보 수집과 이용 방법, ②생성 AI의 산출물의 크리에이터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사항, ③크리에이터의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 AI 사업자가 제안한 솔루션, ④ 크리에이터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등에 중점
    - 현재 생성 AI의 데이터 브로커에 의한 민감한 위치 데이터 매각을 금지하고 민감 위치 데이터를 이용한 모델/알고리즘의 폐기 등을 명령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보다 강화될 계획
  - 미국 FTC와 사법부는 2023년 12월에 대규모 기업들의 합병에 대해 기존의 것에 비해 더욱 강화된 가이드라인을 공표<sup>27)</sup>
    -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①미래의 경쟁을 배제하거나 ②기존의 경쟁압력이 배제되는 방식으로 경쟁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규제 필요
    - 또한 플랫폼 인수와 관련하여, ①플랫폼 간에 행해지는 경쟁, ②플랫폼상에서 행해지는 경쟁, ③플랫폼을 대체(플랫폼에의 의존도를 낮추는)하기 위한 경쟁에의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해 판단하여 규제를 강화할 방침

25) 강인성 있는 공급망 구축의 구체적 행동으로서, ①인여생산 능력에 대한 투자에 의해 산업계에 강인성 향상의 인센티브 제공, ②단기 리스크 저감을 위한 재고 관리와 비축 계획, ③국내 생산에 대한 지원의 지속과 확대, ④공급 기반의 다양화와 신생산 방식에의 투자, ⑤데이터 분석의 활용을 통해 서브 공급자의 가시성을 향상시켜, 전략적 공급 체인 리스크 최소화, ⑥글로벌 방위 생산 확대 및 공급 체인 강인성 향상을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 참여 촉진, ⑦유상 대외 군사 원조 (FMS) 프로세스 개선, ⑧산업 사이버 보안 강화의 8개를 제시. US Department of Defense(2024.1), National Defense Industrial Strategy

26) Federal Trade Commission(2023.12.15.),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Creative Economy Staff Report: Perspectives and Takeaways

27) U.S. Department of Justice Antitrust Division(2023.12.18), Merger Guidelines

## IV. 트럼프 후보의 주요 산업정책

### 1 트럼프 행정부(2017~2021)의 산업정책

#### 가. 2017년 감세 및 고용법

● 2017년 세금 감면 및 일자리법(The Tax Cuts and Jobs Act, 2017)은 재정정책의 성격이 강한 동시에 미국 글로벌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sup>28)</sup>

- 법인세를 35%에서 21%로 인하 함으로써 해외 유보이익의 국내 환류 및 국내 투자를 촉구하는 한편, 감세를 통한 재원을 연구개발 투자에 충당할 것을 기대
- 이 법은 상원에서 찬성 51 대 반대 48, 하원에서 찬성 224 대 반대 201로 공화당 내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

#### 나. 통상 정책

##### (1) 관세

●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Trade Act, 1974) 201조와 301조 및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1962) 232조에 근거하여 관세를 부과<sup>29)</sup>

- 무역법 201조를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는 태양광 셀/모듈에 대해 4년간, 대형 가정용 세탁기와 부품에 대해 3년간의 관세 인상의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2018.2)
  - 태양광 셀/모듈에 대해 2.5GWh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 1년 차(2019년 : 30%)부터 4년 차(2022년 : 15%)까지 추가로 관세를 부과했으며,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도 이와 유사하게 관세율 쿼터(TRQ)에 따라 20~5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

28) Investopedia(2024), What Is the Tax Cuts and Jobs Act (TCJA)?  
<https://www.investopedia.com/taxes/trumps-tax-reform-plan-explained>

29) 산업연구원(2024.5.10), I-KIET 산업경제 이슈 '미(美)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에 철강(25%)과 알루미늄(10%)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2018.3.)
  - 한국에 대해 철강(2018.6.)에 대한 쿼터와 알루미늄(2018.5.)에 대한 관세를 부과

〈표 9〉 트럼프 행정부 시기 주요 관세 조치

대상	부가세율	근거법	내용
가정용 세탁기	18~50%	1974년 무역법 20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 2월 7일부터 트럼프 정권이 대형 가정용 세탁기, 태양광 발전 제품에 적용</li> <li>• 원칙적으로 모든 수입국 대상. 세탁기를 위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2023년 2월 종료</li> </ul>
태양광발전제품	14~25%		
알루미늄제품	10%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 3월부터 트럼프 정권이 알루미늄, 철강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 현재까지 계속</li> <li>• 예외 조치가 인정되거나 수량 제한을 받아들이는 국가 등을 제외하고, 모든 수입국 대상. EU에 대해 2022년 1월부터, 영국 및 일본에 대해 같은 해 4월부터 일정 수량까지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관세 할당 제도(TRQ)를 도입</li> </ul>
철강제품	25%		
우라늄	발동안함		
자동차·동제품	발동안함		
스폰지티타늄	발동안함	1974년 무역법 30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무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우라늄, 스폰지 티타늄의 수입이 안보 위협이라고 각각 조사를 시작하고 대통령에게 보고</li> <li>• 우라늄은 조사 결과 안보 영향 부정됨. 영향을 인정한 자동차·동부품, 스폰지 티타늄에 대해, 이들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 EU나 일본과의 협의를 결과, 발동하지 않음</li> </ul>
중국에서 수입 (리스트 1~3)	25%		
리스트 4A	당초15% → 7.5%		
리스트 4B	발동안함		
프랑스 디지털 서비스세	발동안함		
멕시코에서 수입	발동안함	국제긴급경제권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멕시코의 이민 유입을 안보상 중대한 위기로 여기고, 멕시코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2019년 6월 10일부터 5%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제안</li> <li>• 미 멕시코 간의 협의를 결과 무기한으로 발동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li> </ul>

출처 : 일본 國際通貨研究所(2024.5), 米大統領選と通商政策の行方~「もしトラ」で想定される主要国経済への影響~

-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 시정을 명분으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전방위적인 고율 관세부과 조치를 1~4차에 걸쳐 실시<sup>30)</sup>

30) 중국도 보복 조치로 미국의 수입품에 대해 같은 수준의 추가 관세를 부과. 이 기간 동안 미국의 대중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3.1%에서 21.0%로, 중국의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8.0%에서 21.8%로 상승

- 1차로 연간 340억 달러 규모, 818개 품목에 15) 대한 25% 추가 관세가 기계(51%), 전자제품(27%), 운송장비(21%) 등에 부과(2018. 7.)
- 2차로 연간 160억 달러 규모, 279개 품목에 대한 25%의 추가 관세가 화학(51%), 기계(16%), 운송장비(15%), 전자제품(12%)에 집중(2018. 8.)
- 3차로 1차, 2차에 비해 범위가 대폭 확대된 3차 관세부과 조치는 연간 2,000억 달러 규모, 5,745개 품목에 적용되었으며 화학(24%), 농업(20%), 섬유(17%), 광물(14%), 목재(9%)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도입 (2019. 5.)
- 3차보다 더 규모가 커진 4차 관세(3,000억 달러 규모)는 두 단계에 걸쳐 부과되었고, 1단계에서 농업(36%), 섬유(21%), 광물(15%) 등 3,729개 품목에 적용(2019. 9.)

## (2) 수출 관리

### ●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조치 외에 안보상 중요한 기술의 국외 유출 방지를 이유로 수출관리와 투자규제를 강화

- 2018년 수출관리개혁법(Export Control Reform Act, ECRA)하에 AI·로봇·바이오테크놀로지 등 14개의 최첨단·기반 기술을 수출규제의 대상으로 설정<sup>31)</sup>
- 2019년에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2018.8.)에 근거하여 Huawei 등 중국 5개 기업으로부터의 미국 내 정부 조달을 금지<sup>32)</sup>
  - 연방정부는 서버, 라우터, 감시 카메라 등의 통신 감시 관련 장비 및 서비스를 조달하려는 경우 Huawei, ZTE, Dahua Technology, Hikvision, Hytera가 만든 제품, 부품, 서비스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계약 금지
- 미국 상무부는 Huawei 및 관련 114개 사의 수출 관리를 강화한 데 이어, 2020년 미국 기술을 이용한 미국 지역 이외에서의 제품 수출도 관리 대상으로 함<sup>33)</sup>
  -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019년에 Huawei와 해외 관련 계열사 114개에 대한 수출 라이선스 확보를 요구한 바 있으나 Huawei는 해외에서 미국 장비를 사용하여 생산을 위탁함으로써 반도체 생산에서 계속 미국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사용했다고 판단

31) US Congress(2018), H.R.5040 – Export Control Reform Act of 2018  
<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house-bill/5040>

32) KIEP(2021.4),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전망과 시사점

33) US Department of Commerce(2020.5.15), Commerce Addresses Huawei's Efforts to Undermine Entity List, Restricts Products Designed and Produced with U.S. Technologies

## (3) 대내외 투자규제

● **미국 연방의회는 대미 투자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위험 조사 현대화법(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2018, FIRREA)의 법안을 제정하고 (2018.8), 이에 근거하여 CFIUS 최종 규칙 공표(2020.2)**

- CFIUS는 재무부 산하에 설치되어 재무부 장관이 의장직을 맡고 있으며, 국무부, 국방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등 주요 12개의 관계부처 장관으로 구성<sup>34)</sup>
  - 기존에 대미외국투자위원회(CFIUS)를 통해 미국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을 심사해 왔는데, 중국의 위협 증대에 따라 내용의 업데이트 필요성 부각
  - 자발적 신고를 통한 사전심사가 원칙이나, 이미 투자가 이루어진 거래 건에 관하여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투자를 무산시킬 수 있음
  - CFIUS는 외국인에 의한 인수, 합병 건, 외국인에게 해당 기업의 기술정보를 접근권이나 주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제공하는 경우(Covered Investment)를 대상으로 함

## (4)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의 특성

● **통상정책에서 동맹·다국간 협조를 경시하고 단독 혹은 양자주의로 미국 우선주의 추진**

- 통상정책에서는 무역적자 감축을 위해 WTO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일방적 조치를 남용
  - 취임 직후 TPP(환태평양 파트너십)에서 이탈
  - 중국에 대해 62년 무역확장법 232조나 74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를 부과하여 제1단계 무역합의를 실현
  - 일본 등의 동맹국에 대해서도 철강·알루미늄 제품에의 추가 관세 발동, 자동차·동부품에의 발동의 위협을 배경으로 협상

● **대중 정책은 기존의 무역 마찰 수준에서 보다 격화된 무역 전쟁으로 전환**

- 갈등의 쟁점은 경제 영역에서 가치와 이데올로기까지도 포함되어 체제 간 경쟁 양상으로 확장
  - 기술(수출관리·투자·정부조달 등), 금융, 가치(인권·민주주의, 위구르·홍콩 등), 안보(남중국해, 대만), 이데올로기(미국에 의한 중국 공산주의 비판)를 둘러싼 대립

34) KOTRA(2023.5), 미국 외국인 투자심사제도(CFIUS) 가이드북

- 주요 분야는 첨단기술 관련 규제. TID(기술, 인프라, 데이터)에 대한 중국 접근 제한, 중국 제품 및 서비스 제거
  - 수출 관리, 투자, 정부 조달에 관한 대중 규제 엄격화. 중국 기업을 배제한 청정 네트워크 추진과 첨단 기술 등에서의 부분적·선택적 디커플링
- **글로벌 거버넌스 측면에서 국제기관 및 협정에서 일방적으로 이탈함으로써 다국간 협조체제의 불안정화 초래**
  - 트럼프 행정부는 국익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 국제기구 및 다자간 포럼을 비판하고 일부에서 이탈
    - 파리협정, WHO(세계보건기구),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탈퇴(통고)
    - WTO 상급위원회의 위원선임 거부, '중국에 유리'한 규칙 개정 요구, WTO로부터의 탈퇴도 언급
    - 미중 갈등이 미국의 국제기구·다국간 틀에 대한 불신감을 증폭
- **트럼프 행정부는 파리 협정 이탈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성 대응에 부정적 태도**
  - 파리협정 이탈 : 2017년 6월 불공평한 경제부담을 이유로 이탈의 의향을 표명하였고, 2019년 11월, 정식으로 이탈을 통지
  - 자동차 환경규제 완화 : 2020년 3월 자동차의 GHG와 CAFE 규제의 새 기준을 공표하였고, 2021년부터 적용되는 신기준은 현재 기준치보다 느슨하게 적용
  - 기존 발전소의 배기가스 규제 폐지 : 2015년 8월, 오바마 정권이 최종안을 공표한 내용에 대해 2017년 3월, 폐지 방침을 공표

#### (5) 기타 전략산업 정책

- **미국 정부에 의한 군사기술의 연구개발 지원은 국방성이 중심이 되어 전통적 방위산업과는 다른 방식의 스타트업을 통한 기술개발 추진**
  - 신규 첨단기술을 국방에 이용하기 위한 기술개발의 목적으로 운용해 온 투자펀드인 In-Q-Tel에 국방성이 벤처캐피탈과 함께 출자하여 첨단 군사기술의 스타트업 창출 지원<sup>35)</sup>

35) IQT 홈페이지. <https://www.iqt.org/>



- 2018년에 미 국방부는 AI 전략을 통해 차세대 AI 개발을 진행하는 한편, 육군, 해군, 공군에서 AI의 군사 이용에 관한 연구개발을 진행<sup>36)</sup>
- 첨단 반도체 기술 분야에서는 2018년에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산관학 제휴를 촉진하는 형태로 전자기술부흥계획(Electronic Resurgence Initiative, ERI)라고 하는 차세대 첨단 반도체의 개발 사업을 추진<sup>37)</sup>
- **트럼프 행정부의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은 인공지능, 첨단제조, 양자정보과학, 5G의 4가지 첨단기술이 미국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관련 연구개발 체제 강화 정책 추진<sup>38)</sup>**
- 2019년 2월에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유지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sup>39)</sup>
  - 또한 2019년 6월에 트럼프 행정부는 AI 연구개발의 8대 전략과 추진 방안을 담은 국가 AI R&D 전략계획을 발표<sup>40)</sup>
- 2018년에 첨단 제조에 관한 국가 전략 계획을 수립하여 제조업의 고용을 증가시키고, 강한 공급망과 강한 제조 및 방위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둠<sup>41)</sup>
- 국가 양자이니셔티브법을 시행하고, 양자정보과학을 위한 국가 전략 개요 제시<sup>42)</sup>
- 5G에 대해서는 공급업체의 다양화 촉진, 무선 접근 네트워크의 개방형 기준 사용과 상호운용성을 향상하며, 표준 규격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미국 기술 사용을 촉진<sup>43)</sup>

36) US Department of Defence(2019.2.12), Summary Of The 2018 Department Of Defense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y: Harnessing AI to Advance Our Security and Prosperity

37) IEEE Spectrum(2018.7.16), DARPA Plans a Major Remake of U.S. Electronics

38) US White House OSTP(2019.2.7), America Will Dominate the Industries of the Future

39) US White House(2019.2.11), Executive Order on Maintaining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40)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Council(2019.6.21), The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Strategic Plan: 2019 Update

41) NIST(2018.1.29), National Strategic Plan for Advanced Manufacturing

42) Congress.gov(2018), An act to provide for a coordinated Federal program to accelerate quantum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the economic and national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house-bill/6227>

43) 田村考司(2021), 트럼프政権の産業政策と「未来の産業」

## 2 트럼프 후보 2024년 선거 공약의 산업정책

### 가. 아젠다 47

#### ● 아젠다 47은 2024년 제47대 미국 대선에 출마하는 트럼프 후보가 자신의 웹사이트에 재선 공약을 설명하고 있는 공약집

- 외교·통상정책에서는 모든 수입품에 일률 10%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보편적 기본 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s)나 타국이 미국에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 동률까지 관세를 끌어올리는 상호무역법 도입 등을 제시
  - 중국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MFN) 철회와 일률 60% 초과 관세율 적용, 전자기기, 철강 및 의약품 등 중요 품목 수입의 단계적 정지 등을 주장
- 기후변화·에너지 분야에서는 파리협정에서의 재이탈 외에 2023년 4월의 배출가스 규제와 온실가스(GHG) 규제 철회, EV로의 이행 정책 폐지, 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생산 확대 등을 제시
  - 트럼프 후보는 개발도상국의 GHG 배출억제·삭감·흡수(완화)와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녹색 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에 대한 자금 차출에 반대하는 자세를 표명
- 그 밖에 트럼프는 바이든 정권이 2022년에 통과시킨 IRA에 반대의 입장 표명
  - EV나 배터리의 제조, 충전 스테이션 설치 기업 등에 대한 지원 조치, EV나 에너지 절약 기기를 구입하는 세대에 제공하는 인센티브 삭감 등의 가능성
  - 동 법의 성립을 받아 민간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는 공화당이 우위인 레드 스테이트도 적지 않아, 전면적인 재검토나 철회가 아니고, 일부의 재검토가 될 가능성이 큼
- 트럼프 후보는 바이든 정권이 추진해 온 IPEF에 대해서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표명하고 있으며, 이탈을 발표할 가능성
  - IPEF 협상의 4개의 기둥(무역, 공급망, 클린 경제, 공정한 경제) 중 공급망 협정에 대해서는 2024년 2월 24일에 발효하였고, 이 협정으로부터 탈퇴를 통고할 수 있는 것은 발효로부터 3년 경과 후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이탈에는 시간 필요
  - 청정 경제와 공정한 경제에 대해서도 2023년 11월에 실질 타결하고 11월 대통령 선발 전까지 발효 가능성

〈표 10〉 트럼프 후보 아젠다 47의 주요 산업정책 관련 공약

분야	개요
외교	• 미국 우선 외교정책으로 회귀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정지
	• 미국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했던 비축품의 보상을 유럽에 요구
통상	• 보편적 기본관세 도입, 모든 수입제품에 10% 관세(중국에 대해서는 60%)
	• 트럼프 상호무역법 (Trump Reciprocal Trade Act)의 제정
	• 안전보장을 이유로 중국의 최혜국 대우의 철폐
	• 전자기기, 철강, 의약품 등 중요 품목의 중국에서의 수입을 단계적으로 폐지(Selective Decoupling)
기후변화·에너지	• 파리협정에서 재탈퇴
	• 2023년 4월의 배출가스 규제를 철회
	• 굴착허가나 공유지 임대, 관련 인프라 프로젝트 승인을 가속화하고 원유·천연가스 생산 확대, 전략 석유비축 보충, 원유·가스·석탄 생산자에게 감세를 실시
	• 원자력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원자력 규제위원회를 현대화하고 혁신적인 소형 모듈로에 투자, 핵연료의 국내 조달을 진행해, 외국인 연료에 의존도를 저감
	• 연비규제(CAFE)를 폐지
	• GHG 규제를 철회
	• 클린 보조금(풍력발전 보조금), 백열전구·가스 스토브의 구입 규제를 정지
	• 채굴허가와 공유지 임대, 관련 인프라 프로젝트 승인 가속화, 석유·가스·석탄 생산자에 대한 감세 등에 의한 석화연료 생산 확대
	• 전기자동차(EV)로의 이행 정책 폐지
	• 수소·혼소나 탄소 회수·저류(CCS)는 「미실증의 기술」이며, 회의적인 입장, 송배전망의 현대화를 추진
	• 백열전구, 가스스토브 수입 규제 철회
• 연금 운용 등에 있어 ESG 투자를 행정명령으로 금지. 의회와 협력하여 금지를 영구화	

출처 : Agenda 47

나. 미국우선정책연구소 아젠다<sup>44)</sup>

**2021년에 설립된 미국 우선정책연구소(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 AFPI)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트럼프 후보가 취해야 할 정책을 제시**

- 아젠다는 10개의 주제와 관련하여 경제, 외교, 교육, 에너지·환경 등 30여 개의 영역으로 정리되어 있음
- 이 중 제1주제(모든 미국인을 위해 세계의 가장 창조적 경제에서 일하게 할 것)와 제9주제(모든 미국인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안전한 커뮤니티 제공)에서 통상산업 정책 일부 언급

44) <https://agenda.americafirstpolicy.com/>

● **제1주제에서는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 노동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무역 협정을 협상하고, 미국 노동자와 동맹국에만 의존하는 공급망을 구축하고, 세계 최고의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

- 미국 노동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무역 협정을 협상하는 것과 관련하여, 예를 들어 1962년 무역 확장법 232조와 1974년 무역법 301조, 그리고 무역 집행을 위한 기타 권한을 통한 적절한 관세를 통해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
- 미국 노동자와 동맹국에만 의존하는 공급망 구축과 관련하여, 예를 들어 미국 항구 현대화와 액화천연가스 터미널 건설을 서둘러 진행하고, 국내 제조업의 리쇼어링(reshoring)과 니어쇼어링(near-shoring)을 강화하도록 무역정책 재조정
- 세계 최고의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과 관련하여, 예를 들어 미국의 인프라가 21세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시장의 힘을 활용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 기관 간의 파트너십을 장려

● **제9주제와 관련하여 중국 공산주의의 악의적 영향력이 발생시키는 문제들을 해결할 것을 제안**

- 여기에서는 미국의 경제적 안보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중화인민공화국(PRC), 더 구체적으로는 집권 중국공산당(CCP)이라고 지적
  - PRC는 정기적으로 미국의 이민 정책과 개방된 사업 및 학술 환경을 이용하여 매년 수천억 달러의 미국 지식재산(IP)을 훔치고, PRC는 또한 공공 담론 내에서 반미적이고 친공산주의적 감정을 조장하기 위해 사악한 관행을 사용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제한이나 규제를 도입
  - 연방정부 차원에서 외국 정부나 외국인이 주립대학과 지방 학교 시스템에 기부하는 외국 기부금과 기금을 제한·규제
  - 공자학원이 주 및 지방 학교 커리큘럼, 인력 구성 또는 기타 운영에 관여하는 것 금지
  - 미국 대학에 다니는 적대적인 정부를 가진 국가 출신 외국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
  - 중국 법인으로의 지식재산권 이전을 금지하고, 위반자의 엄격한 처벌을 제정, 시행
  - 중화인민공화국(PRC)이 대부분 소유한 기업이나 회사를 국가가 관리하는 연금 기금에서 제거
  - 주 및 지방 법 집행 기관에서 PRC에서 제조된 드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

## 다. 프로젝트 2025

**● 미국 보수 성향 헤리티지 재단은 2024년 4월에 2025년 트럼프 재집권을 위한 프로젝트 25라는 보고서를 작성**

- 이 보고서는 ①제1부 : 행정부 고삐 채우기, ②제2부 : 공동 방위, ③제3부 : 일반 복지, ④제4부 : 경제, ⑤제5부 : 개별 규제기관의 총 5부(Section)로 구성
- 산업정책과 관련하여 다루고 있는 내용은 기후변화 대책과 대중국 대책 부분

**● 기후변화 대책 관련하여 프로젝트 2025는 기존의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정책을 완화 혹은 무효화 할 것을 제안**

-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무효화하고,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GHG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포기할 것을 제안
- 또한 GHG 배출을 억제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환경보호청(EPA)의 규모를 축소하며, 기후 변화 경보 산업의 주요 원동력 중 하나인 국립 해양 대기청 (NOAA)을 폐지할 것을 제안
- 나아가 클린 기술에 3,700억 달러를 제공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 에너지부 산하 대출 프로그램 사무소와 클린 에너지 시범 사무소 폐쇄와 국가 안보 위원회 의제에서 기후변화 완화 제외 및 동맹국에 화석연료 사용 장려 내용 포함
  - 연방정부가 GHG 배출을 규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일반 대중이 과학적 결함과 연구 부정 행위를 식별하고 기후학 연구에 법적으로 이익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 그러나 공화당 내 기후변화 옹호자들은 Project 2025의 이러한 정책에 동의하지 않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 한편 중국에 대한 현재의 구도를 유지하며, 보다 강화된 정책 추진을 제안**

- 중국을 주요 위협 대상으로 여기고 있고, 중국과 화해하려는 입장을 비판하면서 중국에서의 전자제품이나 의약품 등의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중국에 의한 에너지, 농업, 첨단기술 분야의 소유를 금지하도록 할 것을 제안
  - 이 보고서의 서문에서 “30년 동안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지도자들은 미국의 산업 기반을 파괴하는 한편 공산주의 중국과 그들의 대량 학살을 자행하는 공산당을 수용하고 부유하게 했다”고 언급

## V. 대선 후 산업정책 전망

### 1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강(Platform) 비교<sup>45)</sup>

#### ● 미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은 산업정책을 포함한 주요 정책 방향을 담은 정강을 제시하고 있음

- 경제정책의 경우,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 중심 정책을, 공화당은 규제 완화와 감세, 기술 혁신 장려 등에 각각 중점을 둠
- 에너지 정책의 경우, 민주당과 공화당의 기조가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양상
  - 민주당은 ‘청정에너지 확대, 석유 지배력 축소’를 모토로 청정에너지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 미국산 저탄소 자재 사용 의무화 등 환경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며, 그린 뉴딜 프로젝트에서 20,0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계획
  - 공화당은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등 모든 에너지 생산 증대”를 모토로, 에너지 관련 규제를 전면 해제하면서 원전에 대한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고, 에너지 생산 허가 절차도 간소화할 것임을 강조하고, 전기차 관련 의무 조치 무효화를 언급
- 대중국 정책의 경우, 양당 모두 강경 기조를 취하고 있으나 세부 전략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여, 민주당은 ‘위험 완화(derisking)’ 노선을 통한 대중 관계의 안정성 유지, 공화당은 ‘중국으로부터의 전략적 독립’을 천명
  - 민주당은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핵심광물, 철강, 전기차, 배터리 등 분야에서 대중제재를 확실히 하되, ‘완전한 분리(decoupling)’ 대신, 필요시 새로운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김
  - 공화당은 최혜국 대우 지위 철회, 중국산 필수 재화(전자제품, 철강, 의약품) 수입 단계적 중단, 중국인의 미국 부동산 및 기업(산업) 구매 금지, 중국산 차량 수입 금지 등 무역·투자 분야에서 강력한 제재 의사를 표명
- 무역 통상 분야의 경우, 공화당이 다양하고 강력한 무역정책을 제시하였으며, 민주당은 별도 정책 기조를 내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공화당은 미국이 1조 달러의 무역 적자에 놓인 상황을 강조하며 보편 관세 부과와 트럼프 상호 무역 법안 통과까지 확정적으로 명시하고, 일자리의 해외 아웃 소싱 기업은 미 연방정부와 거래를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천명

45) 한국경제인협회(2024.8.14), 2024 美대선 양당 경제정책 기조 분석, US Democratic Party(2024.8), Democratic Party Platform, Final Master Platform, US Republican Party(2024.7), 2024 GOP Platform

〈표 11〉 민주당 대 공화당 정강 주요 내용 비교

분야	민주당	공화당
경제	<p>〈1장 : 아래로부터, 중산층을 중심의 경제 성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프라 투자 확대</li> <li>노동 기준 강화</li> </ul> <p>〈2장 : 부가 아닌 노동의 보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유층 및 대기업 증세, 중산층 및 저소득자 감세 - 법인세율 21% → 28%로 인상</li> <li>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li> </ul>	<p>〈1장 : 인플레이션 퇴치와 물가 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너지 생산 해방</li> <li>연방정부 지출 억제, 가계부담 규제 완화</li> <li>안보를 통한 경제 안정</li> </ul> <p>〈3장 :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혁신장벽 및 비용증대의 규제 완화</li> <li>감세, 일자리법 지속, 팁세금 면제, 세액공제 확대</li> <li>공정하고 상호 호혜적인 무역</li> <li>신뢰할 수 있고 풍부한 저비용 에너지</li> <li>기술 혁신 장려</li> </ul>
에너지	<p>〈4장 : 기후 위기 해결, 에너지 비용 절감, 에너지 독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정에너지 생산 확대, 석유 지배력 축소, 송전선 투자, 성장 지원</li> <li>가전제품 및 자동차 효율 기준 강화하여 배출량과 에너지 비용 감축</li> <li>탄소 미국산 시멘트, 철강 자재 사용 의무화 확대(Buy Clean and Buy American)</li> <li>2만명 이상 청년을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고용</li> <li>오염 유발 기업 책임 단속 강화</li> <li>대중교통, 항구, 수로 전기화 추진/건설 및 중공업 산업의 배출 감축 촉진</li> <li>불공정 석유/가스 보조금 수십억불 이상 폐지</li> <li>글로벌 청정 에너지 공급망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에너지 증대(1장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석유와 천연가스 생산 재활성화</li> <li>원자력 포함 모든 에너지 생산 해방</li> <li>민주당의 사회주의적 그린뉴딜 정책 종식</li> </ul> </li> <li>신뢰가능 하고 풍부한 저비용 에너지(3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너지 생산 허가 절차 간소화</li> <li>미국을 에너지 독립국, 초강대국으로 탈바꿈</li> </ul> </li> <li>미자동차산업 부활을 위한 규제 철폐(5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바이든의 전기차 관련 의무 조치(IRA 관련) 무효화, 중국산 차량 수입 금지</li> </ul> </li> </ul>
대중국	<p>〈중국과의 전략적 경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과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크잉(위험완화)하여 미국의 이익과 가치를 옹호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에서 안정성 유지</li> <li>AI, 반도체, 양자컴퓨팅의 첨단기술 중국 수출 접근 제한</li> <li>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대중국 관세 인상</li> <li>* 다만, 트럼프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60% 관세 부과 방안에 대해서는 비판적</li> <li>핵심 광물과 기술을 위한 공급망을 중국으로부터 리쇼어링</li> <li>동맹국과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 견제</li> <li>AI 가이드라인 등 새로운 분야에서는 필요시 협력</li> </ul>	<p>〈중국으로부터의 전략적 독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의 최혜국 대우 지위를 철폐</li> <li>필수 재화의 중국발 수입 단계적 중단</li> <li>중국이 미국 부동산과 기업을 사들이지 못하도록 조치</li> <li>중국산 차량 수입 금지</li> </ul>
무역 통상	<p>〈9장 :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도태평양프레이밍워크(PEF), 글로벌 인프라 및 투자 파트너십, 아메리카 경제 번영 파트너십, 미국-케냐 전략적 무역 및 투자 파트너십과 같은 양자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에너지 개발 및 인프라 투자</li> <li>EU, 인도, 싱가포르, 한국 등 동맹국과 공동 기술 이니셔티브를 통해 글로벌 기술에 대한 혁신과 공동 규범 제정</li> <li>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중산층 및 노동자 번영 도모</li> <li>G7, 세계은행 등 다자 기관을 통해 경제적, 외교적 파트너십 구축하고 결집</li> </ul>	<p>〈5장 : 불공정 무역으로부터 노동자 및 농민 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우선 무역 정책 지속 추진, 부정행위 국가에 맞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산 상품에 보편 관세 부과, 트럼프 상호 무역 법안 통과</li> </ul> </li> <li>중국으로부터 전략적 독립</li> <li>경제안보를 위해 중요한 공급망 국내로 복귀</li> <li>미국 제품 구매 및 미국인 고용 정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자리를 해외 아웃소싱하는 기업은 연방정부와 거래 불가</li> </ul> </li> <li>제조업 초강국 실현, 제조업 일자리 회복</li> </ul>

출처 : 한국경제인협회(2024.8.14), 2024 美대선 양당 경제정책 기초 분석

## 2 해리스 집권 시 산업정책 추진 전망

가. 바이든에서 해리스로의 후보 전환 영향

### ●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기본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이어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

- 2020년 민주당 예비경선 발언에서, 기후변화 대책을 다른 나라와 공조하고, 석유 및 가스 보조금 폐지, 셰일가스 채굴 규제 및 환경 투자에 추가 지원을 나타냈고, 중국에 대한 관세조치를 유지할 것을 표명함<sup>46)</sup>
- 해리스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기후변화 대책에서 바이든보다 더 혁신적이라는 평가<sup>47)</sup>
- 2024년 8월에는 물가안정, 주택공급 촉진, 아동 및 저소득층 세액 공제, 의료비 지원에 대해 언급하고, 산업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고 있지 않으나 기후변화 강화 대책의 연장선에서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를 유지할 전망<sup>48)</sup>

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 ● 천연가스의 유해성 연구 결과 기반으로 주택과 건물 천연가스 사용 규제

- 뉴욕시, 2030년까지 전력 7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204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목표 설정
- 뉴욕주 신축건물 천연가스 사용금지 제안, 2025년 소규모 빌딩을 시작으로 2028년 대형 빌딩에 적용, 2030년 신규 천연가스 히팅시스템 설치 금지
  - 다만, 텍사스, 아리조나 등에서 소비자의 에너지 선택 권리 침해를 언급하며 반대하는 의견, 12개 주에서 천연가스 사용금지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된 상황
- 현재 미국 가정의 40%가 가스스토브에 의존, 미국 연방정부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천연가스 스토브 사용을 억제하는 규정을 검토 중

46) CNN Politics(2020.8.20), Transcript: Kamala Harris' DNC speech

47) 日本貿易振興機構(2024.7), 米環境エネルギー政策動向マンスリーレポート

48) White House(2014.08.16.), Remarks by Vice President Harris at a Campaign Event in Raleigh, NC. 한편 해리스 대통령 후보는 2024년 8월에 현 미네소타 주지사인 팀 월즈(Tim Walz)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였고 아직 그의 산업정책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만한 내용은 거의 없으나 민주당의 기존 환경정책 및 대중국정책의 기조와 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 유럽에서 발효된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의 미국 도입 전망<sup>49)</sup>

- 임박한 정치적 전환 속에서 에너지 전환과 기후 정책 환경을 탐색하는 미국에게 CBAM의 설계와 구현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전세계적인 노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2024년 3월, 미국 하원은 연방 탄소세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 때문
  - 이 반대 결의안은 상품과 에너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고, 이는 미국 가계와 산업에 부담을 더하여 미국의 글로벌 무역 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강조
-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내 CBAM 도입 관련하여 암묵적, 명시적 탄소 가격 책정을 옹호하는 입법 제안이 계속해 나오고 있음<sup>50)</sup>
  - 신뢰할 수 있고 객관적이며 검증 가능한 배출 강도 및 투명성 제공법 (PROVE IT Act) : 이 법안은 2023년 Christopher Coons 상원의원이 도입했으며, 2024년 1월 상원 환경 및 공공사업위원회에서 양당의 지지를 받아 통과
    - \* 이 법은 CBAM을 직접 도입하는 것은 아니고, 미국과 다른 국가의 GHG 배출량과 관련된 포괄적인 제품별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
  - 에너지 혁신 및 탄소 배당금법(HR 5744) : 이 법안은 2023년 9월 하원에서 Salud Carbajal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대표가 제안했으며, 청정 에너지 기술에 대한 혁신과 투자 장려를 목표로 함
    - \* 이 법안은 2023년에 CO2 환산 톤당 15달러로 탄소 가격을 명시적으로 책정하고, 이후 매년 석탄, 원유, 천연 가스를 포함한 GHG 배출 화석연료와 이러한 화석연료로 생산된 제품의 생산 및 수입에 대해 톤당 10달러의 증가 수수료를 부과
  - 청정경제법(S. 3198) : Bill Cassidy 상원의원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미국산 제품보다 GHG 배출량이 많은 외국 상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만, GHG 강도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무역 파트너의 상품에는 더 관대하게 부과
- 그러나 실제 도입에 있어서는 미국 내에서 향후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
  - 탄소 가격 책정 메커니즘을 원활히 구현하고, 기존의 무역 및 기후 정책을 조정하여 CBAM 도입의 경제적 위험을 피하기 위한 CBAM 설계 필요

49) CSIS(2024), Crafting a Robust U.S.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50) 관련 법안은 민주당 계열뿐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발의하고 있고, 트럼프도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관세 정책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

〈표 12〉 민주당 집권 시 기후변화 대응 강화 방향

분야	내용
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35년까지 전력부문 탄소 배출 제로</li> <li>• 재생에너지 확대: 태양광 패널 5억 개, 풍력터빈 6만 개 설치 목표</li> <li>• 에너지저장장치와 재생에너지 전용 송전망 건설</li> </ul>
에너지 효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30년까지 신축 건물 100%에 탄소배출 순제로 적용</li> <li>• 5년 내에 4백만 개의 빌딩과 2백만 채의 가구 에너지 효율 리모델링</li> <li>• 에너지 빈곤층 지원 프로그램 도입제도 변경</li> </ul>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캘리포니아식 2030년 신차 기준 클린카 비중 50% 목표</li> <li>• 5년 내에 50만대의 스쿨버스 탄소배출 제로 차량으로 대체</li> <li>• 50만개 이상의 공공 전기차 충전소 설치</li> <li>• 중고차 교환 프로그램 도입해 탄소배출 제로 차량 구매시 인센티브 지급</li> <li>• 탄소배출 차 생산업체들의 신설과 구공장의 전환에 보조금등 지원</li> <li>• 공공교통의 탄소배출 제로 운송 수단도입 확대</li> <li>• 항구와 철도의 탄소배출 저감 위한 투자</li> </ul>

출처: 유진투자증권(2024.01), 미국 대선과 산업정책 변화

### ● 고용 확대 차원을 포함하여 전기차로의 전환 가속화 추진

- 경합주(Swing State)에 전기차 등 그린 산업 일자리 대폭 확대
- 미시간, 조지아 등에 전기차 관련 신공장 유치가 정치권의 주요 아젠다
- 2백만 명 이상인 내연기관차 고용인력과 화석연료를 클린카/클린에너지 부문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책의 중심

### ●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업들에 ESG 정보 공개 강화 추진

- 미국 조달 시장 참여자들에게 Scope3를 포함한 탄소배출량, 중대 기후 리스크의 재무적 영향에 대한 보고에 기반하여 감축목표 수립을 요구하는 규칙 발표
  - 캘리포니아는 2027년부터 Scope 3까지 공시(연매출액 10억달러 초과 기업)
- Scope3의 경우 경계가 애매하고 기업들의 소송 가능성도 있어서 제외할 수도 있다는 예상과 함께 해리스의 당선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

다. 대중국 통상정책의 강화<sup>51)</sup>

**●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 통상무역과 관련하여 무역법 301조 철강 관세를 현행의 3배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미국 통상대표에 요구**

-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정부의 중국 철강 기업에 대한 장기간의 보조금이 과잉 생산을 창출한 결과 중국의 저렴한 철강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 수출되어 미국 철강 노동자의 고용을 부당하게 빼앗았다고 주장
-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과되었던 무역법(1974년) 제301조에 따른 대중 관세의 재검토를 요구
  - 중국의 반경쟁적 무역 관행이 인정될 경우, 현행 평균 7.5%의 대중 철강 관세율 3배 인상 검토
  - 미국 철강은 미국 경제의 견인차, 미국의 경제·국가안보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강조
- 나아가 중국제 철강과 알루미늄이 이러한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멕시코를 경유하여 미국으로 수입되는 것에 대처하기 위해 멕시코에 협력을 요구
  - 美 통상 대표는 멕시코에서 미국으로의 철강 수출 증가와 멕시코 제3국의 철강 수입에 대한 투명성 부족에 대해 즉각적인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멕시코 정부에 요구
  - 현재 철폐되고 있는 1962년 통상확대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재발동 시사

**● 대중국 규제 강화의 일환인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UFLPA)을 중국 상품의 미국 내 수입제한을 위한 주요 근거로 삼아 강화하여 운용할 가능성**

- 바이든 행정부에서 통과된 UFLPA에 따르면, 중국 위구르 지역 내에서 생산되었거나 미국 정부가 지정한 리스트에 등재된 제품(UFLPA 적용 제품)에 해당되는 모든 제품은 미국으로의 수입 금지
- 특정 제품의 UFLPA의 적용 여부 판단 시 최종재가 아닌 원자재 또는 중간재까지 검토하여 제품 내에 포함된 일부 원자재 또는 중간재가 UFLPA 적용 상품에 해당한다면 해당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 점차 UFLPA 적용 범위가 이제는 리튬이온 배터리, 철강, 알루미늄, 타이어 및 기타 자동차 부품 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중국산 부품을 다수 포함한 전기차와 배터리의 대 미국 수출에도 상당한 영향 예상

**●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후보가 주장하는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의 보편적 기본 관세 도입을 강하게 비난**

- 이것이 실행되면 미국 소비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평균적인 가정에서 연간 약 1,500달러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

51) OWLS(2024.5.17), 米大統領選挙戦で加熱する「米国第一」競争~「トランプ化」進むバイデン政権の通商政策

라. 국제 질서

**● 국제관계에 있어서 회복력 있는 공급망, 클린 에너지 전환, 과학기술·안보 협력을 중심으로 소다자 협력체를 주로 활용할 전망**

- 공급망 강화는 미국의 거의 모든 협력체에서 추진하고 있고, 권역별로는 인도-태평양 중심의 IPEF, 미주 지역에 기반한 APEF, EU와의 TTC와 같은 협력체를 가동하고, MSP와 같이 핵심 광물 확보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도 추진
- 기후 위기 대응의 경우 IPEF를 비롯한 미국의 각종 협력체에서 다루고 있고, 한·미·일 정상을 통해서도 협력 약속
- 미국은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AUKUS, QUAD 등 소수 국가와 연대하는 안보협력체를 운영 중이고, 이를 통해 과학기술 협력도 도모

〈표 13〉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국제 협력체

분야	참여국	경과	분야
IPEF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브루나이, 피지,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2022.5 발족. 현재 무역필라를 제외한 3대 주제(공급망, 클린경제, 공정경제) 협상 타결	4개 주제(무역, 공급망, 클린 경제, 공정한 경제 중 심으로 인도-태평양 역내 협력 강화
APEF	미국, 캐나다, 바베이도스, 칠레, 콜롬비아, 코스 타리카, 도미니카, 에콰도르, 멕시코, 파나마, 페루, 우루과이	2022.6 발족 2023.1 장관급회담	①DIADB(미주개발은행) 역할 및 투자 강화, ②회복력 있는 공급망, ③반부패 및 인프라 투자, ④클린 에너지 일자리 창출과 탈탈소 및 생물 다양성 확보 ⑤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무역 보장
MSP	한국, 미국,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스웨덴, 영국, EU집행위원회	2022.6.14. 발족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
PGII	G7+ (G7과 한국, 호주, 코모로스, 쿵제도,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월드뱅크)	2023.5.19 발족	저개발 국가에 대한 인프라 투자 확대
TTC	EU	2021.9.29 발족 2022.5.16. 2차회의 2022.12.5. 3차회의 2023.5.30. 4차회의 2021.9.15 발족	10개 워킹그룹 중심으로 협력 강화: ①기술 표준, ②기후 및 그린 기술, ③공급망 안정성, ④ICT 및 서비스 보안과 경쟁력, ⑤데이터 거버넌스와 기술 플랫폼 규제, ⑥기술 오남용으로 인한 보안과 인권 침해, ⑦수출통제, ⑧투자 스크리닝, ⑨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 접근 향상, ⑩세계적인 통상 과제
AUKUS	미국, 호주, 영국	2021.9.15 발족	미국과 영국의 호주의 핵추진잠수함 확보 지원 사이버 역량, 인공지능, 양자 기술 및 수중 (undersea) 역량을 중심으로 합동 능력과 상호 운용성 강화
한미일 협력체	한국, 미국, 일본	2023.8.22	3자 차원의 협의체 운영 예정

출처 : 각종 자료 정리

### 3 트럼프 집권 시 산업정책 추진 전망<sup>52)</sup>

#### 가. 기후변화 대응 후퇴

#### ● 트럼프 집권 시 미국 내 제조업 부흥 등의 정책 기조는 바이든 행정부와 동일하지만, 친환경 정책에서는 크게 후퇴할 전망

-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 정책(전기차 지원책 및 내연기관차 관련 환경 규제 등)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왔고, 본인의 취임 첫날 전기차 지원책 및 자동차 관련 각종 환경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음
  - 이전 트럼프 행정부의 전례를 감안하면 트럼프 집권 시 행정부는 이러한 공약을 현실화하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높음
- 이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총 321개의 행정 조치를 단행하였는데, 그중 115개가 기존 규제 완화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 중 100여 개가 환경 규제 완화와 관련
  - 대표 사례로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체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고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고자 도입한 클린 파워 플랜(Clean Power Plan, CPP) 정책의 무효화 시도
  - 트럼프는 CPP 정책을 무효화하고자 CPP 재검토를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화력발전소를 장려하는 적정 친환경 에너지규칙(Affordable Clean Energy Rule, 이하 'ACE')을 추진
  -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시도들의 일부는 최종적으로 연방 법원에서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소송절차를 거쳐 친환경 정책들을 복귀시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친환경 정책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음

#### ● 트럼프 집권 시 공약에 따라 내연기관차 배기가스 규제 및 연비규제를 철회할 전망

- 2023년 4월 단행된 배기가스 규제를 철폐하고 강화된 CAFE(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연비규제를 종료
  - 배기가스 초과 배출 벌금을 5.5달러에서 15달러로 상향한 것을 변경

52) 세계 유명 경제 조사기관인 EIU는 트럼프 당선 시 미국 산업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함축적으로 요약한 바 있음. ①트럼프는 아마도 특정 보조금은 유지하겠지만 관세 장벽을 상당히 강화할 것이고, 그는 또한 보다 미국 우선의 접근 방식을 추구할 것이며, 동맹국의 기업을 배제할 수도 있음. ②인프라, 반도체, 청정 에너지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이미 이루어졌지만,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중교통, 재생 에너지, 전기 자동차(EV), 배터리, 오염 제어와 관련된 프로젝트가 위험에 처할 수 있음. ③새로운 트럼프 행정부에서 투자 지출을 줄이게 되면 그동안의 투자로 큰 혜택을 본 지역구(예 : 노스캐롤라이나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조지아주)에서 연방 관리와 주지사 및 양당의 선출직 의원 사이에 충돌이 생길 위험이 있음. EIU(2024.6.18.), US election: its impact on industrial policy

- CAFE(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규제 연평균 5~10% 강화한 것을 축소
- 차체가 크고 연비가 낮은 고급차, 대형 SUV 판매 비중이 높아질 수 있으며, 환경 규제로 인한 내연기관차의 비즈니스 리스크가 축소될 전망
- 픽업트럭 비중이 높은 미국 업체에 혜택이 집중되어 이미 짜여진 친환경차 전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게 됨

## 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철회

### ● 트럼프 집권시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정책인 IRA에 철회에 대한 시도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바이든 행정부의 3법중 IRA만이 공화당 의원의 찬성표를 1표도 얻지 않고 통과됐고, 공화당은 계속 IRA에 비판적이며 철폐를 위한 법안도 의회에 제출했으며, 트럼프 후보는 IRA의 기후변화 대책 철폐 입장 표명
-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하원을 하나씩 차지하는 경우, IRA 철폐 법안이 성립될 전망은 낮고, 트럼프가 당선되고 상하 양원 모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이미 구현 단계에 들어있는 IRA 조치가 철폐될 가능성이 남아있음
-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의 지역구 이해관계로 인해 IRA의 폐지가 의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존재
  - 전기차, 배터리 분야 등 IRA로 인한 투자는 공화당 지역구(하원 기준)에서 더 많이 이루어짐
  - 과거 공화당 내 논의 과정에서 중서부 지역 의원들의 지역구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바이오 연료 관련 세액공제를 철폐하지 못한 사례도 있음
- 의회의 결정과 관계없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 재무부 지침 등 다음과 같은 행정부의 권한을 활용하여 IRA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영역 존재
  - IRA의 세액공제 혜택 한도를 강화하는 방법으로서 FEOC에서 규정한 중국 관련 지분의 하한을 25%보다 낮추는 방안
  - IRA의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 배터리 부품 요건 등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양극재, 음극재와 같은 배터리 핵심 소재를 핵심 광물이 아닌 배터리 부품으로서 분류하여 북미산 제조로 요건을 강화하여 적용
  - FTA 체결국 요건에서 FTA의 범위를 재정의
  - IRA 관련 아직 완성되지 않은 각종 규정을 철폐
  - 내연기관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전기차로의 전환을 지연 등

### ● 또한 부분적으로는 IRA에 포함된 다양한 친환경 정책이 주된 공격 대상이 될 전망

- 트럼프 후보는 친환경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특히 30D Credit)이 미국 자동차 산업의 종말을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할 정도로 전기차에 부정적인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기차 지원 정책을 대폭 축소할 전망

### ● 전기차 전환은 이미 전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미국 자동차회사들도 궁극적으로는 전기차 기반 양산 체제로 전환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바, 트럼프가 당선되어도 IRA의 완전한 무력화보다는 제한적 무력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더 클 것

- 외국 자동차·배터리 회사들이 미국의 여러 주(특히 공화당에 우호적인 남부지역)에 이미 상당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이러한 투자는 고용 창출에 대한 기대로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음
  - 예를 들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주지사 헨리 맥마스터는 트럼프의 열혈 지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폭스바겐 스카우트 전기차 공장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13억 달러 규모의 인센티브 패키지를 입법화
-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배터리 보조금 등을 일방적으로 철폐하는 방안 등을 펼치기보다는, 오히려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한 각종 요건을 더 신설하여, 미국 회사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기 쉽게 만들고, 외국 회사에는 사실상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채택할 가능성<sup>53)</sup>
  - 이와 관련하여, IRA의 세부지침인 해외우려집단(Foreign Entity of Concern, FEOC)<sup>54)</sup> 규정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의 최소화 또는 적용 유예를 시도할 가능성도 존재

53) 그러나, 전기차 산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최대 수혜자가 중국이라는 점, 전기차 산업의 전체 공급망 및 시장을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현실 등으로 인해 전기차를 둘러싼 국가안보 이슈가 확대되고 있는 점, 그리고 전기차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최근 전기차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IRA에 대한 전면적 무력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물론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임. SHIN & KIM(2024.4), 미 대선 '트럼프 재집권' 시 우리 기업의 미국 비즈니스에 미칠 영향: 對 미국 전기차/배터리 투자 및 무역 정책을 중심으로

54) 미국 IRA에 따른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친환경 전기차가 2024년부터 FEOC에 의해 제조 또는 조립된 배터리 부품을, 2025년부터 FEOC에 의해 추출/처리/재활용된 핵심 광물을 각각 포함해서는 안됨(IRA 제13401조에 의해 개정된 내국세법 제30D(d)(7)조). SHIN&KIM(2023.12.15), 미 정부, “외국 우려 실체(Foreign Entity of Concern)”에 대한 해석규칙(안) 발표

## 다. 미국 우선의 보호주의 및 관세 정책 강화

### ● 트럼프 후보는 아젠다 47을 통해 이전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취해진 통상정책 기조를 펼쳐나갈 것을 천명

- 이전 트럼프 행정부 시기, 대미 무역 흑자국에 대한 불균형 해소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세우며 다수의 행정명령에 서명
- 또한 중국의 부당한 무역관행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으며, 지식재산권 침해, 강제 기술이전 등을 이유로 중국산 수입품에 각 10%(이후 일부 품목에 대해 추가로 관세 상향 조정) 특별 관세를 부과<sup>55)</sup>
- 나아가 중국의 Huawei와 ZTE(중싱통신)의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거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미국의 기체결 무역 협정의 재협상 등을 추진하며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한 보호주의 무역정책을 강하게 추진

### ● 트럼프 집권 시 미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법인 트럼프 상호무역법(Trump Reciprocal Trade Act)을 통과시키려고 할 전망

- 트럼프 후보는 미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트럼프 상호 무역법'을 제시, 통과시킬 전망
  - 트럼프 후보는 상호 무역법이 상대국이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함
  - 미국의 자동차 수입 관세는 2.5%에 불과하나 중국은 15%, EU 10%. 부품에 대해서도 비대칭적 관세 장벽이 존재
  - 상호무역법에 의하면 높은 쪽이 내리던가 낮은 쪽이 올려야 되는 상황
- 그러나 상하 양원을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지 못할 경우, 법안 통과가 어려울 수 있음

### ●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보편적 기본 관세가 도입될 전망

- 보편적 기본 관세란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전면적으로 10%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최근 선거 유세에서 이것의 도입을 보다 분명히 하고 있음

### ● 필수 물자에 대한 대중 수입을 축소하고 연방정부의 조달 계약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전망

- 전자제품, 철강, 의약품 등 필수 물자에 대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4년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중국에서 아웃소싱하는 모든 기업에 대한 연방 조달 계약을 금지하는 조치 추진

55) 관세를 포함한 통상정책의 최종 결정권은 의회에 있음



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

● **트럼프 집권시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심사 규정이 더욱 강화될 전망**

-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미 CFIUS에 대한 심사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미 재무부가 CFIUS 심사 관련 규정의 집행 및 위반에 관한 처벌지침을 공개하는 등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
- 특히 미국의 공급망 안보를 위해 중국과 직간접적 관련성이 있는 기업의 미국 내 투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CFIUS 심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그림 9] 트럼프 당선 시 예상되는 영향

	관련 정책	산업 영향
소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트럼프 감세의 전면적인 지속</li> <li>• 보호주의 정책 추진(관세 인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소비자의 가처분소득 감소 회피</li> <li>• 물가상승을 배경으로 한 구매의욕 감퇴</li> </ul>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 차기 배출가스 규제, EV 도입 목표의 철회</li> <li>•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일부 수정(EV 관련 세액공제 축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장기적 제품 라인업 판매 전략 수정</li> <li>• EV 관련 투·자비용 부담 증가</li> </ul>
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전소에 도입하는 기술 기준 관련 규제 완화 철회</li> <li>•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의 일부 수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력발전소의 사용 계속 기간 장기화</li> <li>• 탈탄소화의 움직임이 재생에너지에서 CCS(이산화탄소 저장 기술)로 이동</li> </ul>
석유·가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유가스의 생산·소비 촉진</li> <li>• 자동차 차기 배출가스 규제의 철회, 발전소 관련 규제 완화 철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유가스의 생산·수출 기회 확대</li> <li>• 가솔린과 전력용 가스 수요의 급감 회피</li> </ul>
건설·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지출 억제</li> <li>• 트럭 감세의 전면적 지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프라 투자에서 민간자금 부담 증가</li> <li>• 감세 지속 전망에 따른 부동산 투자 축소 회피</li> </ul>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 정책 강화(레거시반도체를 포함한 수·출투자 규제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에 대한 수·출투자 기회의 상당한 축소</li> <li>• 미중 사이의 사업분단 가속화</li> </ul>

출처 : 三井住友銀行(2024.02.), 2024年米国大統領選挙の展望 ~ 想定される産業影響

## VI. 미국 대선의 영향 및 대응 방향

### 1 주요 영향<sup>56)</sup>

#### 가. IRA 및 CHIPS법 축소의 영향

- **트럼프 후보 집권 시 바이든 행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해 왔던 IRA와 CHIPS법의 완전 철회는 아니더라도 지원 축소가 예상됨**
- **IRA의 주요 인센티브 조항 중 하나인 섹션 45X 첨단 제조생산 세액공제(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AMPC)는 최근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수익성 부진을 보완하는 역할**
  - 2023년에 배터리 기업은 AMPC에 따라 셀 1킬로와트시(kWh)당 35달러, 모듈은 10달러의 보조금을 받고 있음
  - 2023년 하반기부터 전기차 수요 둔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AMPC 수혜까지 소멸될 경우, 중단기적으로 2차전지 업체들의 수익성 부진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 IRA가 축소되는 과정에서 AMPC 수혜 배분과 관련하여, 미국 완성차 업체들과 협상에 있어서도 국내 배터리 업체들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높음
- **또한 IRA의 경우 전기차 세액공제 보조금이 폐지되면 현재 상업용 친환경차량에 대한 조항인 세액공제 혜택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임**
  - 현재 IRA 섹션 45W 조항에 따라 상업용 친환경차량은 최대 7,500달러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sup>57)</sup>, 현대차·기아는 이를 활용, 리스/플릿(fleet : 기업, 렌터카 업체, 관공서 등에 대량 도매판매) 방식으로 일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음<sup>58)</sup>

56) 한국신용평가(2024.8.13), 2024 미국 대선에 따른 영향 점검 (II)

57) 상업용 친환경 차량의 경우 섹션 30D에 의한 미국 내 생산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음

58) 2022년 12월 이러한 가이드라인 발표의 영향으로 2023년에는 미국으로의 전기차 수출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2024년 상반기에는 미국 전기차 시장의 전반적 부진으로 감소 발생

●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CHIPS법에 의거하여 미국 투자에서 보조금 지원을 받았으나 CHIPS법이 축소되거나 보조금 지원 조건상 가드레일 조항이 기존에 비해 국내 기업에 비우호적으로 결정될 경우 자금압박 등 부정적 영향을 받을 전망

- 삼성전자(텍사스주 테일러시에 2030년까지 약 450억 달러 투자)에 64억 달러를, SK하이닉스(인디애나주에 38.7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건설할 계획)에 대해서는 4.5억 달러의 보조금 지원을 결정받았으나 이것의 타격 예상
- 이외에도 대출 지원과 최대 25%의 세액공제 등 미국 내 Fab 운영에 따른 높은 인건비와 운영비, 자본지출을 완화해 줄 수 있는 혜택이 예정되었으나 이것의 타격 예상
- 가드레일 조항의 초과 이익 공유 한도를 현행 75%에서 더욱 높일 경우 국내 업체들의 미국 내 투자 성과는 낮아짐

#### 나. 환경 및 에너지 정책 변화

● 트럼프 후보는 탄소배출량 감축 정책의 폐지나 고비용의 친환경에너지 대신 저렴한 화석연료 개발 촉진 등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는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트럼프 후보 집권 시, 이로 인한 큰 영향 예상

● 바이든 행정부는 2030년까지 신차의 50%를 무공해 차량(BEV, PHEV, Fuel Cell EV)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효(2021. 08.)한 바 있는데, 트럼프 후보 집권 시 이러한 행정명령을 다시 폐기할 가능성 있음

- 이 경우 전기차 수요 감소로 국내 2차전지 업체들이 설비확장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투자비 회수의 부담과 수익성 악화 예상됨
- 다른 한편으로 국내 자동차업체들은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에 다소 유리할 전망

● 트럼프 후보가 집권하여 미국 내 셰일 오일 생산 확대, 석유 업체에 대한 규제 및 세금 완화, 전략적 비축유 추가 확보 등의 에너지 정책을 시행할 경우, 국제유가의 하향 안정화를 초래할 전망

- 이때 국내 정유사의 수익에는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운전자금 부담 축소 및 원유 도입의 안정성 등을 통해 재무적 안정성에 긍정적 영향

● **트럼프 집권 시 미국은 가스 및 원자력 발전 위주의 전력시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전력시장에서도 LNG 발전의 중요성이 보다 부각될 가능성이 있음**

- 트럼프 에너지 공약에 따라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기조가 완화될 경우 가스와 원자력 발전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전력 공급 구조는 장기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화석연료, 원자력 우선 정책의 영향으로 글로벌 에너지 전환이 지연되고 국내 전력시장에서도 당초 계획 대비 신재생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지 못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원자력과 더불어 LNG 발전에 긍정적인 산업 여건이 지속될 전망
- 그러나 미국 내 화석연료 생산 확대 정책은 국내 민자 발전사의 영업실적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 예상

● **트럼프의 환경 규제 완화 정책은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의 미국 수출 물량 증가나 친환경 제품으로의 포트폴리오 전환에 대한 시장 선점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

-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석유화학 제품 관련 규제정책 폐기를 공언하고 있으므로 집권 시 국내 석유화학 제품의 미국 수출 수요가 증가할 전망
- 또한 규제 완화로 미국 석유화학 업체들이 친환경으로의 전환 속도를 늦출 경우, 현재 활발한 투자와 연구개발을 진행 중인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이 시장을 선점할 기회

● **트럼프의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 확대 기조를 고려하면, 향후 미국 내 LNG 프로젝트 진행 가속화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LNG선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 존재**

- 2024년 1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LNG 수출이 에너지 안보,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미국 내 LNG 프로젝트의 신규 수출 승인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표

다. 대중국 제재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

● **해리스나 트럼프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 우선주의, 대중국 규제에 따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 위상의 쇠퇴와 그에 따른 세계 경제질서 내 주도권 상실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강화되어 오고 있음
  -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1년 11월 이후, 중국의 경제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의 제조업 고용이 대폭 감소하는 등 미국 제조업 둔화 양상이 뚜렷해졌고, 반도체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중국 포함) 분업화로 인한 미국 내 제조 기반 약화 진행

- 특히 중국 위협론이 크게 부각된 것은 2015년 발표된 '중국 제조 2025'로서 여기서 중국은 미국을 겨냥하여 타국에 의존하는 경제에서 벗어나 미래를 담당하는 첨단기술로 선도하는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있다고 미국 당국이 인식
- 2021년 3월,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AI)는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를 통해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미국은 중국을 이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경종을 울림<sup>59)</sup>
- \* 정부가 조기에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AI뿐만 아니라 양자 기술 등 중장기적으로 경제를 견인할 다양한 신형 기술로 인해 미국 산업계는 뒤처져서 회복되기 어렵다고 지적

[그림 10] 해리스 집권 시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 예상

	수출입	국내 투자	국외 투자	공급망
 반도체	3 대중국 수출 점진적 감소	3 현행 투자 계획 유지	3 보조금 수혜 추가 투자	3 수출통제 동참 요구
 자동차	4 현행 관세 유지	3 국내 유턴기업 일부 증가	3 전기차 수요 하이브리드 대체	4 한국 부품업체 편입 가능성 ↑
 이차전지	3 수출 증가 유지 현지 생산 확대	3 미 전기차 시장 중장기 성장	4 IRA 보조금 현행 유지	3 탈중국화 기조 유지
 철강	3 CBAM, GSSA 비관세 장벽 ↑	3 현상 유지	3 현지 수요 대응 투자 유지 필요	3 공급망 리스크 현상 유지
 화학	3 대미 수출입 비중 미미	3 장기 관점 투자 지속	3 친환경 정책 유지 강화	3 영향 미미 유가 점진 하락
 바이오의약품	3 단기 변동 미미 장기 증가 기대	4 국내 유망 분야 투자 증가	4 대미 제조 투자 확대	3 투자 유치 기회 대미 의존 심화
 방위산업	3 미 진입 기회 해외 경쟁 심화	3 방위비 부담 소폭 인상	- 영향 미미	4 방산협력 진전 (조달협정 등)

출처 : 산업연구원(2024.5), 미(美) 대선 항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주 : 각 부문 영향은 매우 부정적 1 - 보통 3 - 매우 긍정적 5)

**트럼프 집권에 의해 보편적 관세율이 적용될 경우, 이차전지, 자동차, 반도체 업체들의 수익성 악화 예상**

- 이차전지 업체들의 경우 전기차 수요 둔화와 광물가격 하락에 따른 부정적 레깅효과 발생 등 업황 부진 국면에서 관세율 상승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경우 큰 부담을 안을 것으로 보임  
※ 레깅효과 : 원재료를 구입한 시점과 실제 제품 생산에 투입한 시점 간의 가격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손익
- 자동차의 경우, 미국 판매량의 약 43%만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는 수준으로, 10% 관세 부과시 전반적인 차량 원가 상승이 불가피

59) National Security Commiss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2021.3), Final Report

- 반도체의 경우 2023년 기준 DRAM 주요 3개사 및 NAND 주요 5개사의 미국 소재 Fab CAPA 비중은 각각 2%, 3%로 대부분 미국 역외에서 생산되고 있어 보편적 기본 관세 부과시 비용상승 부담 불가피
- 철강의 경우 2018년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수입할당제를 적용받고 있는데, 10% 관세 부여 시 미국 시장내 가격경쟁력 저하로 수출 감소 예상
- **트럼프가 집권 할 경우, 과거처럼 한국을 비롯해 미국을 상대로 무역수지 흑자를 크게 기록하고 있는 국가가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음**
  - 트럼프는 2016년 대선 당시,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크게 보고 있는 중국에 대해 45%, 멕시코에 대해 3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음
  - 2023년 기준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약 445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트럼프 재집권 시 한국을 대상으로 다양한 무역구제 조치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자동차 품목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 또는 다른 형태의 수입 규제 조치를 통해 자동차 분야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도모할 가능성 있음
    - 자동차 분야는 우리나라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으며, 트럼프는 자동차 산업을 자국의 주력산업으로 주목
- **공급망에서 미국의 대중국 배제 정책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국 내 경쟁에서 단기적으로는 유리한 위치의 반사이익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나 해당 물량의 공급 지역 전환이나 원자재 확보 제약에 따른 부정적 영향 우려됨**
  - 중국산 전기차, 이차전지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기업에게는 단기적으로 미국 시장 내 유리한 입지 확보 예상
  - 석유화학은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 수요의 위축과 역내 공급 과잉 심화의 부정적 영향 예상
  - 한편, 미국의 대중국 수축 규제에 대응하여 배터리, 반도체의 원자재에 대한 한국으로의 수출을 규제할 가능성 존재하는데, 이 경우 원자재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국내 업계 큰 타격 예상

〈표 14〉 트럼프 집권 시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 예상

구분	영향
2차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RA 정책 변동으로 정부 인센티브 약화될 경우, 국내 2차전지 업체들의 중단기 수익성 저하 불가피</li> <li>미국 내 설비 투자 집중되는 가운데, 전기차 전환 정책 완화 등으로 수요 둔화 장기화될 경우, 고정비 부담 확대, 투자비 회수 지연 전망</li> <li>보편적 기본관세 부과 시 비용 및 투자부담 증가 예상되나, 2차전지 공급망에서의 중국 배제가 지속되는 점은 국내 업체들의 미국시장 내 우수한 입지를 지지하는 요인</li> </ul>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세율 상승, 전기차 세액공제 축소 또는 폐지시 미국 판매마진 및 보조금 혜택 축소, 수익성에 부정적</li> <li>단, 생산시설 확대와 유연한 파워트레인 대응능력을 바로 영업기반 유지 전망</li> </ul>
메모리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관세로 미국 내 판매마진 축소 예상, 과징화된 메모리 경쟁구도로 관세부담 일부는 전가 가능할 전망</li> <li>CHIPS법 축소 내지 폐기 시 투자전략 재점검 불가피, 보조금 지원 가이드라인 조항도 비우호적으로 변경될 가능성 내재</li> </ul>
정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내 원유공급 확대와 국제유가 하락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국내 정유사들의 영업실적에 부정적</li> <li>트럼프 에너지 정책은 석유제품 수요 개선, 재무부담 완화, 원유 도입의 안정성 증대에 기여 →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내 정유사들의 사업 및 재무적 변동성 완화 전망</li> </ul>
민자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기조가 완화됨에 따라 브릿지 연료인 LNG 발전에 긍정적</li> <li>미국 내 화석연료 생산 증대로 글로벌 에너지가격 하락할 경우, 단기 실적측면에서는 다소 부정적</li> </ul>
석유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규제 완화시,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의 이국향 수출 물량 증기(미국 석유화학 수요 개선) 및 친환경 제품(바이오·재활용 플라스틱 등) 시장 선점 기회 확대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li> <li>對중국 견제기조 강화될 경우, 공급망 재편에 따른 국내업체 수혜보다는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 수요 위축과 아시아 역내 공급 과잉 심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전망</li> </ul>
방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라 지정학적 리스크와 불확실성 심화 →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 확대에 긍정적</li> <li>단, 중동지역은 미국의 수출 규제 완화로 국내 방산업체의 무기 수출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 존재</li> </ul>
철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내 가격경쟁력 저하 및 주변국 수입규제 확산 등에 따른 통상환경 저하</li> <li>대미 수출경로 차단된 중국산 제품의 대체시장 유입에 따른 역내 수급부담 심화 가능성</li> </ul>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석연료 투자 확대 기조 고려 시, LNG선 발주 증가 가능성은 긍정적</li> <li>메탄올·암모니아 추진선 발주는 당초 예상 대비 다소 감소·지연될 수 있으나 LNG 추진선 발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친환경선박 발주가 급격히 감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li> <li>보호무역 강화 기조로 해상물동량이 감소하여 발주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은 다소 부정적</li> </ul>
타이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편적 관세 적용 등 보호무역 기조 강화 → 재차 관세부담 증가할 것으로 예상</li> <li>미국 현지 생산기반 확보 수준에 따라 업체별 대응수준 및 관세 영향 상이할 전망</li> </ul>
해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해상물동량 둔화 우려 → 극동-미주 노선, 아시아 역내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 예상</li> <li>무역패턴 변화로 항로 다각화 수준이 해운사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가능성 → 선제적인 노선포트폴리오 다변화, 영업테트워크 구축 등으로 대비할 필요</li> </ul>
종합상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국제무역환경 저하 우려 - 트레이딩 비중 높은 업체 영향 불가피</li> <li>삼국간 거래, 거래선 다변화 등으로 매크로 영향 완화 노력 필요</li> </ul>

출처 : 한국신용평가(2024.08.13), 2024 미국 대선에 따른 영향 점검 (II)

## 2 대응 방향

### ● 통상 현안에 대한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체계 마련 필요<sup>60)</sup>

- 경제 안보와 연계된 산업 및 통상 현안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설계와 함께 주요국과의 정책 공조 강화 등을 적극 추진
- 국익 최우선 관점에서 주요국의 산업 및 통상정책과 경제법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다층적인 신통상 전략 수립 필요
  - 특히, 기후·환경, 디지털, 노동, 공급망 등 다양한 통상 이슈와 규범에 대해 단순한 국제협력보다는 우리의 기초 확립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
- 통상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인도, 중동 등 주요국과 FTA 등 통상협정 적극 추진
- 핵심 광물과 자원 확보 등 전략적인 가치가 큰 신흥국과는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전략적 통상협력 방안 모색

### ● 주요 통상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소규모 다자 협력체계 구축과 중장기적 전략적 대응책 마련

- 공급망 안정화, 국제 통상질서의 변화, 탄소중립, 디지털 통상 등 주요 통상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소규모 다자 협력체계 구축과 참여 필요
  - 불확실성이 커지고 공고한 다자연대의 글로벌 질서에 대한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가별 자국 우선의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각자도생의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에 대비
- 미국, 중국, 아세안 및 인도, 유럽 등의 주요 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산업 협력 및 통상에서 우리나라의 전략적인 입장에 대한 근본적 검토 필요
  - 단기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에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보다 중장기적으로 상호 동반성장이 가능할 협력 방안 도출에 노력할 필요
  - 기존 다른 국가와의 FTA나 인도와의 CEPA 등을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음

### ● 특히, IRA의 지원 사업 관련 비즈니스를 운영 중인 기업들은 트럼프 당선 시 IRA의 기존 규정들을 일부 무력화하거나 미국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운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향후 비즈니스 플랜을 구상해야 할 것임<sup>61)</sup>

60) 산업연구원, 미국의 포괄적 경제안보 조치에 따른 향후 전망과 산업정책 과제, 2024.5

61) SHIN & KIM, 미 대선 “트럼프 재집권”시 우리 기업의 미국 비즈니스에 미칠 영향: 對 미국 전기차/배터리 투자 및 무역 정책을 중심으로, 2024.4



- 특히 전기차 및 배터리 관련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기업 및 미국내 일자리 창출을 우선시하는 성향을 이용하여 미국 내 기업들과 비즈니스 구조를 연결시키는 방안도 고려
- **대미 수출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은 특히 UFLPA의 집행 강화 경향을 예의주시할 필요**
  - 수출 품목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 및 중간재의 원산지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이 빈번한 국가와 무역을 진행할 때 더욱 유의
  - UFLPA의 모니터링 초점이 태양광 및 전기차 분야에 더욱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관련 산업 부문의 기업들은 각별히 UFLPA 관련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역 관여 기업 및 제품에 대해 보다 강화된 실사를 수행
- **미국의 대중 견제 조치에 대한 지속적인 진화와 포괄적 제재 보완·강화에 기민한 대응 필요<sup>62)</sup>**
  - 미국은 대중 견제를 위해 자국 기업에 대한 영향 또한 일정 부분 감수하고 조치를 단행 중으로, 이와 관련된 지원 및 제재 사항 숙지 필요
  - 첨단 분야의 대중 견제 대상의 구체화와 제재 수단에 대한 확대와 강화 등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황에 맞는 국내 대응 필요
- **일부 분야(반도체, 이차전지 등)와 소재·장비 무역 등 실물 부문에 집중된 산업 공급망 측면의 경제 안보 이슈 확장 필요**
  - 분야별 바이오산업과 금융, 클라우드 등 연관산업 및 서비스 분야를 포괄하는 경제 안보 이슈 확장과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첨단산업에서의 직접적인 대상 업종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 목적을 고려한 전후 공급망에 포괄되는 업종과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 필요
- **국내의 관련 첨단기술·산업 분야 투자유치를 위한 리쇼어링(Reshoring) 전략, 외투기업 지원 확대, 기술협력 강화 및 국내 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 분야 유치 여건 개선과 국내 경쟁력 강화 추진 필요**
  - 안보 관련 첨단산업과 관련 연관 서비스의 국내 투자 및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 첨단분야 미국의 대중 금융·투자 제한에 대응, 미국 금융기관과 벤처투자사의 기업 육성 역량에 접근을 위한 모태펀드 확대

62) 산업연구원, 미국의 포괄적 경제안보 조치에 따른 향후 전망과 산업정책 과제, 2024.5

〈표 15〉 미국 대선 후 신통상 질서 하의 우리나라 산업정책 대응 방향

항목	내용
국가적 산업 협력 통합 거버넌스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조금 등 국내 산업 지원 인센티브, 진영 간 수출통제와 보복조치 증가 추세에 대해 적시의 사안별 외교적 협상력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국가적 산업협력 컨트롤 타워 마련 및 제 부처 기능의 통할 위한 거버넌스 정비가 시급한 시점</li> </ul>
신산업·통상 전략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거 비용·효율 등 '경제논리'에 따른 중국 중심 공급망 세계화 국면에서 '전략논리'에 따른 주요 산업의 국제 분업 구조 재편기에 진입함에 따라 업종별·권역별 경쟁우위 확보 전략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li> </ul>
공급망 재편 기회요인 극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공급망 재편에 성공적 적응을 위해, 북미 및 인도태평양 현지 시설 투자 대상 외교적 지원 및 정보(인텔리전스) 조직과 민·관 협응 체계 강화에 정책 자원 투입 수준 대폭 확대</li> </ul>
경제안보 리스크 관리 체계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 및 러시아 등 원자재 보유국으로부터의 소재부품장비 소싱, 양안관계 긴장으로 인한 급변 사태 등 돌발 리스크에 대한 시나리오 및 대응 방안 선제적 마련, 더불어 방어적 수단 외 동맹과 연계한 공세적 대응 방안 역시 새롭게 고안할 필요</li> </ul>

출처 : 산업연구원(2024.5), 미(美)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 자문위원 (가나다 순)

---

강구상(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 팀장)

민정훈(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부교수)

박성준(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 부연구위원)

정은미(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본부장)

조성대(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실장)

# 2024년 미국 대선 이후 산업정책 전망과 국내 정책 대응 방향

- 발 행 일 2024년 10월
- 발 행 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정책단 기술동향조사실
- 발 행 인 민병주 원장
- 기획/진행 문희수 실장  
정희상 연구원
-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305 한국기술센터 4층  
산업기술정책단 기술동향조사실  
02-6009-3593  
www.kiat.or.kr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글로벌 이슈특집의 내용은 무단 전재할 수 없으며, 인용할 경우 반드시 원문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글로벌 이슈 특집 2024-01

# 2024년 미국 대선 이후 산업정책 전망과 국내 정책 대응 방향

